

#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1996. 12.

이 교 덕  
(북한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받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 요 약

본 연구는 수 년 전에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그 변화를 주도한 사회세력의 역할에 관한 소련 및 중국, 동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I.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통제원리의 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였다면 북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계획 경제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이다. 북한 지도부도 이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대외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변화과정은 결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유지 방식의 폐쇄성, 분단체제 관리 및 체제경쟁의 부담,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에서 얻은 부정적 교훈 등 북한이 소련이나 동유럽, 심지어 중국

정도의 개혁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로부터이든 아래로부터이든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장기지배에 따른 권력엘리트들의 응집성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미성숙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이미 변화를 가져올 단초는 존재한다.

II. 공식적으로 김정일체제가 출범하면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는 김일성이 의거했던 전통적 및 카리스마적 정통성에서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통성(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을 갖춘 전문 기술관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록 김정일체제하에서도 충성심과 당성에 토대한 전문가의 중용은 이념적·체제적 이유에서 우선시될 것이 분명하지만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방지향적 전문가의 등용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 불가피한 개방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방의 정도와 내용을 둘러싼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이는 전문기술관료를 주축으로 한 개혁파의 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III. 한편 북한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숙에 필요한 구조적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집단의 분화와 도시화, 산업화,

교육수준의 향상, 세대교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급격히 이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숙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사회내에 수많은 민중조직이 출현하여 시민사회가 성숙하려면 북한사회가 후기 전체주의 사회로 이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에 지식인과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보편적으로 지식인은 미래에 대한 이상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후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낄 것이고 그러한 괴리가 커질수록 비판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 목 차

제 I 장 서론 .....	1
1. 연구목적 .....	1
2. 체제변화의 개념과 변화유형 .....	6
가. 체제변화의 개념 .....	6
나. 체제변화의 유형 .....	9
제 II 장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주도세력 .....	11
1. 위로부터의 변화: 전문기술관료 .....	12
가. 소련의 개혁과 .....	13
나. 중국의 개혁과 .....	19
2. 아래로부터의 변화: 지식인 .....	25
가. 시민사회의 성장 .....	25
나. 지식인의 역할 .....	33
제 III 장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	41
1. 위로부터의 변화: 전문기술관료 .....	41
가. 변화의 가능성 .....	41
나. 전문기술관료의 성장 .....	48
2. 아래로부터의 변화: 지식인 .....	56
가. 변화의 가능성 .....	56
나. 경계대상으로서의 지식인 .....	65
제 IV 장 결 론 .....	72
참 고 문 헌 .....	77

## 제 I 장 서 론

### 1. 연구목적

‘역사의 종말’과 ‘신국제질서’는 1990년대 초 국제정치무대를 풍미한 단어들이다. 후쿠야마(F. Fukuyama)를 비롯한 많은 역사철학자들은 전체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승리를 선언하면서 마르크스체제가 이제 박물관 속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유물로 전락한 운명에 처해 있음을 주장했다.<sup>1)</sup> 이 주장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듯 1990년을 前後해 민주주의적 기준 및 가치, 서구양식, 자유시장경제, 인간의 존엄성 등을 강조하는 변화가 지구촌을 휩쓸었고 북한도 이 역사적 대세를 거역할 수 없을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역사의 종말’을 조롱하듯 그로부터 수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북한은 세기적 변혁의 여파에서 벗어나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이후 북한이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도 체제 및 정권을 비교적 잘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주민을 통제하고 동원하며 관리하는 당과 경찰

---

1) Francis Fukuyama,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후쿠야마의 주장에 대한 다양한 반론에 대해서는 Timothy Burns, ed., *After History?: Francis Fukuyama and His Critics* (Maryland: Little Adams Quality Paperbacks, 1994) 참조.



기구들이 각각의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주민들에 대한 통제는 주민의 정치적 행위뿐 아니라 일상 생활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시되고 있다.

북한주민들은 2중 또는 3중의 조직생활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당과 정부기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다. 특히 주민통제에 있어 당의 역할은 막강하고 광범위하다. 당규약은 북한사회 곳곳에 침투해 있는 방대한 수의 당원들이 당의 노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충실하게 노력하고 주변에서 발생하는 모든 결함과 부정적 경향을 신속히 보고할 것을 그 임무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어느 조직에라도 노동당 조직이 침투하지 않은 곳은 없기 때문에 당원들이 모두 당노선 및 정책에 충실하여 주위 사람들의 동태를 계급적 시각에서 인지, 보고할 경우 일반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의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은 영원히 변화를 거부할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전제정치를 포기하고 정치적 민주화를 표방하는 체제개혁을 단행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지금의 지배집단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도 권력을 내놓을 수 없다. 현재 북한사회는 외부세계와 철저히 차단되어 있고 주민들의 생활은 스파르타식으로 혹독하다. 일반주민들의 사회적 이동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으며 개인승배가 정치체제를 질식시키고 있다.

그러나 아마도 개인해방의 시대로 진입하는 인류역사의 발전 추세를 북한만이 홀로 거역하기는 어려울 것이다.<sup>2)</sup> 최근 북한

의 특기할 변화는 경제사정 악화와 관리들의 부패 때문에 차츰 엄격한 통제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북한에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무단여행을 감행하고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원래 여행증 발급이 무척 까다롭지만 식량난과 자재난이 극심해지면서 “농촌에 식량 구하러 간다”든지 “자재 또는 부품을 구하러 간다”고 하면 바로 여행증을 발급해 준다고 한다.<sup>3)</sup> 즉 여행제한 조치의 효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것인데, 이러한 여행기회의 증가는 북한 주민들간의 정보교류를 촉진시키고 있다.

그리고 당·정관료의 부패, 점증하는 물질숭배주의, 사회의 기강해이 등은 당과 정부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씩 불평과 비판 및 요구가 표면으로 나타나고 있다. 극소수이지만 체제와 정치를 비판하는 소규모 주민들의 비밀모임도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1991년에 평양에서 유학생활동을 한 이영화의 증언에 의하면 자신이 참석 한 비밀모임에서 참석자들이 엄청난 보복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는 고충을 토로하면서 “때가 오면 우리들도 일어선다”고 말했다 한다.<sup>4)</sup> 이영화의 증언은 북한사회내에 소수나마 반체제인사들이 있으며 통제와 억압의 북한 땅에서도 반체제

2)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p. 132.

3) 1996.5.23. 현성일; 6.21. 최승학; 6.26. 윤성철; 7.8. 진광호; 7.13. 여만철의 증언.

4) 이영화, 「평양비밀 집회의 밤」 (서울: 동아출판사, 1994), p. 259.

운동의 싹이 돋아나고 있음을 시사해 준다.

사실 어떠한 정권 또는 체제도 대중활동 및 국민 개개인의 생각들을 완전히 지배, 통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던 적이 없었다.<sup>5)</sup> 탈북자들이 속출하고 노동수용소에 수많은 정치범들이 수용되어 있다는 것은 북한이 불완전한 통제력 모델의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한다.<sup>6)</sup>

따라서 지금 쿠바와 함께 북한이 마지막까지 “사회주의는 과학이다,” “사회주의는 필승불패”라고 외치고 있지만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있다. 당면의 경제적 난국이 더욱 심해진다면 특유의 집단주의 정치체제에 도전하는 세력이 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그 시기야 어떻든 북한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변화를 주도할 세력이 어떤 집단일 것인지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아마도 본 연구가 정밀한 작업이 되려면 북한체제의 변화에 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변화를 유도하고 추진할 세력은 시나리오에 따라 당연히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북

---

5) Julian Birch, “A Sche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v. 28, 1995, p. 3.

6) 국제사면위원회와 아시아워치, 미 국무부 등이 최근 발간한 「북한 인권 실태보고서」에 의하면 북한의 정치범 교화소는 11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에 약 20만명의 정치범이 수용되어 있다고 한다. 「서울신문」, 1996.11.23.

한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시나리오를 제시하지 않는다. 이러한 시나리오의 제시는 너무 복잡한 작업이 될 뿐 아니라 각 시나리오의 현실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단지 수 년 전에 진행된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과정을 돌이켜 보면서 그 변화를 주도한 사회세력의 역할에 관한 소련 및 중국, 동유럽의 사례를 바탕으로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을 유추해 보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우선 '변화'라는 개념의 정리가 필요하다. 단순한 김정일의 실각, 김정일을 둘러싼 집권세력의 변화, 당·정무원·군·기타 통치기구들의 변화, 북한이라는 '국가'의 변화, 북한주민의 가치체계·의식구조·행동양식·생활방식의 변화는 그 차원·규모·내용들이 크게 다르다. 더욱이 여러 가지 변화들 가운데 어느 것이 가장 쉽고 빠르게 나타날 것인가도 분명치 않다. 따라서 본 연구가 말하는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그 변화가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등의 문제에 대한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 2. 체제변화의 개념과 변화유형

### 가. 체제변화의 개념

통상 우리가 체제변화라고 할 때 그것은 '체제내 변화'(change within the system)와 '체제의 전환'(change of the system)을 포괄한다. '체제내 변화'는 체제가 놓여 있는 환경이 끊임없이 변함에 따라 그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형태로 변화하지만 체제의 기본적 속성은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로 공산주의체제들이 기존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변화된 환경에 적합한 새 이데올로기를 발전시켜 현실에 대한 극복을 시도해 왔다는 것은 널리 아는 사실이다. 이에 비해 '체제의 전환'은 "한 체제가 유지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다.<sup>7)</sup> 즉 체제가 자신의 유지에 필요한 조절기능을 원활히 수행하지 못해 붕괴되거나 새로운 체제로 전환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체제의 변화와 관련하여 체제내 변화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변화의 차원과 밀접한 관

---

7) 파슨즈는 이 기능으로 적응(adaptation)기능, 목표달성(goal attainment)기능, 내적 통합(integration)기능, 패턴유지(pattern maintenance) 또는 긴장해소(tension management)기능을 지적하고 있다. Talcott Parsons and Neil Smelst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pp. 33~37.

계를 가지고 있다. 사실 어느 사회이든지 변하고 있고 변화하기 마련이지만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변화의 차원을 명확히 구분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더욱이 동일한 변화개념을 모든 하위체제에 동시에 적용할 수도 없다. 경제분야에서는 체제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한편 정치분야에서는 체제내 변화가 진행되는 있는 중국의 예에서 보듯이 변화의 개념을 모든 부문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변화를 개념적으로 정의하는 데 직면하는 모호성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몇몇 공산주의체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변화의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고 있다. 예를 들면 존슨(C. Johnson)은 전체주의모델이 변화의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비판하면서 변화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하고 있다.<sup>8)</sup>

첫째, 정치체제의 변화로서 독재자에 의한 一黨統治體制로부터 집단지도체제나 당 지배의 연합체제로의 이행, 둘째, 소기의 사회적 행위를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의 변화로서 테러에 대한 의존도의 감소, 셋째, 경제체제의 변화로서 중앙집권적 명령체제로부터 분권적 경제관리체제 내지 시장사회주의로의 이행, 넷째, 외부로부터 강요된 공산정권의 경우 위성국가의

---

8) Chalmers Johnson,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p. 3.

지위로부터 고객국가(client state)의 지위나 민족적인 독립공산 국가로의 이행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는 서진영 교수가 제시한 네 가지 조건에서도 나타난다. 서교수는 완전한 탈사회주의는 아니더라도 ① 사회주의적 이데올로기, ② 당-국가체제, ③ 생산수단의 집단화에 기초한 중앙집권적 계획경제, ④ 진영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국제관계 등에 있어서 어느 하나 이상의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는 경우를 북한의 '의미있는 변화'라고 한다.<sup>9)</sup> 즉 체제내의 변화는 이러한 조건에서의 변화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체제내 변화와 체제전환을 엄밀히 구분할 때 체제의 전환은 사회주의체제의 완전한 또는 대폭적인 포기를 뜻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변화의 차원을 감안하여 체제내의 변화는 김정일의 실각이나 집단지도체제의 등장과 같은 최고 지도자나 권력엘리트에서의 교체, 더 나아가서는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지만 당-국가체제에서 변화가 있거나 시장사회주의를 채택하는 등의 제도의 변화로, 체제의 전환은 사회주의체제에서 권위주의체제나 민주주의체제로의 이행으로 정의한다.

---

9) 서진영,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서울: 통일원, 1989).

## 나. 체제변화의 유형

헌팅톤(S. P. Huntington)은 권위주의체제가 민주화되는 과정을 변혁의 주체에 따라 위로부터의 변화, 아래로부터의 변화, 위·아래의 타협에 의한 변화로 분류한다.<sup>10)</sup>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체제변화를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단순화한다. 왜냐하면 실제의 변화는 대부분 위와 아래라는 양자의 상호작용에 의해 발생하기 때문이다.

헌팅톤의 경우 위로부터의 변화란 엘리트가 민주화를 앞장서서 추구하여 정치체제를 변모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유형이 실제세계에서 발생하기란 매우 어렵다. 물론 국민과는 상관없이 엘리트에 의해 순전히 위로부터 변화가 시도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위로부터의 변화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일부의 엘리트가 재빨리 포착, 먼저 변화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성립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이 대안이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아래의 호응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위로부터의 변화가 성립하는 경우는 양자간 상호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이 많다. 가령 엘리트들 사이의 권력투쟁에 의해서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있게 된다면, 이는 위로부터 아래에게 체제변화를 위한 선택의 가능성이

---

10) Samuel P. Huntington,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pp. 109~163.



주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빨리 감지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정권은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이 때는 기껏해야 체제내 변화에 그치는 점진적 개혁(reform)의 형태를 띠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순수하게 아래로부터 변화의 대안이 제시되는 것도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로 어려운 일이다. 특히 위가 경직되어 있다면 아래의 요구를 수용하는 대신 강제력으로 누르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전혀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래로부터의 변혁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강제력에는 본질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로부터 전혀 대안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아래 스스로가 대안을 창출해 낼 수도 있다. 이는 강제력에 의한 지배의 종말을 의미하며, 결과는 개혁이 아니라 체제전환으로 이어지는 혁명(revolution)이 될 가능성이 높다. 단, 순전히 아래로부터 오는 변화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내놓는 타협안을 거부하고 자신들이 낸 대안을 성공적으로 고수할 수 있을 정도로 아래의 결집력이 강할 때 가능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단순화할 경우 북한에서 각각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과 그 변화를 주도할 세력을 추론해 보고자 하였다.

## 제Ⅱ장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정치적으로는 다원주의를, 경제적으로는 시장화 및 사유화를 지향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구체적 변화과정 및 결과에 있어서는 다양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sup>11)</sup>

그러나 변화과정상의 주도권을 어느 쪽이 가지고 있었느냐를 기준으로 보면, 소련 및 중국처럼 공산당 주도하에 위로부터의 개혁을 추진한 사례와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같이 대체로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이고 강력한 개혁요구가 전면적인 체제전환으로 이어진 사례로 분류되고, 이 두 유형의 변화를 촉진한 요인으로는 개혁적인 권력엘리트의 등장과 시민사회의 성장이 지적된다. 전자는 위로부터의 변화에 필수적이고 후자는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조건이 된다.

---

11) 편차를 가져온 요인으로는 사회주의 국가들의 자생적 혁명전통과 개혁전통, 지배엘리트의 특성, 경제발전 정도와 경제위기의 정도, 서방세계와의 관계, 사회적 다원화, 사회구성원의 가치관 등이 지적되고 있다.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 계획연구: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의 검토」(서울: 통일원, 1990), pp. 139~142;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5~16.

## 1. 위로부터의 변화: 전문기술관료

위로부터의 변화는 정권내 권력엘리트들이 재야의 반정부세력을 강압적으로 통제할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현상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엘리트내부에 체제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일단의 개혁파들이 존재하여 엘리트간의 노선투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sup>12)</sup> 물론 체제의 이념적 성격과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체제변화의 주역은 인간이 될 수밖에 없고 특히 상층 권력엘리트의 정치적 성향이 매우 중요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sup>13)</sup>

체제변화를 경험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의 하나는 경제위기 극복을 둘러싸고 엘리트간에 노선갈등이 있었으며 그 노선갈등으로 인하여 지도체제가 통합되지 못하고 균열이 발생하여 밑으로부터의 체제도전에 취약했다는 점이다.<sup>14)</sup> 사실 권력엘리트들이 획일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한, 체제변화는 불가능하다. 개혁파의 출현은 통치집단의 분열을 야기해 정치적 변화의 일차적 동인이 된다.

---

12) Huntington, *The Third Wave*, p. 127.

13)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p. 81.

14) Raymond Taras, "Political Competition and Communist Leadership: A Historiographical Introduction," in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1989), p. 4.

### 가. 소련의 개혁과

1980년대 중반 이래 고르바초프는 정치와 경제의 동시적 개혁을 추진하였으나 경직된 소련의 정치·경제구조로 인해 체제 위기가 증폭되었으며, 이는 곧 민족국가의 독립에 따른 연방해체와 인민대중의 반체제화를 초래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지배엘리트는 정권경쟁적 파벌로 분열되었으며 급진적 성향을 가진 엘친은 국민들의 반체제적 성향에 힘입어 정권을 획득함과 동시에 체제전환을 진행시켰다.

그러나 소련정치에 있어 현상의 개혁을 둘러싼 권력엘리트내 분열의 역사는 그리 짧은 것이 아니다. 스탈린 사후 파벌주의와 노선경쟁은 끊임없이 전개되었다.

소련에서는 스탈린 사후 수정주의자들이 등장하여 스탈린 치하의 전체주의적 독재주의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특히 1956년 제20차 공산당대회 이후 후르시초프는 개인숭배와 신격화를 초래하는 일인지배체제를 집단지배체제로 환원시키고, 국민생활 전반에 레닌식의 민주주의가 실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같은 후르시초프의 주장은 어느 정도의 사유화와 시민생활의 개선 등 내부개혁에 대한 약속이었다.<sup>15)</sup>

---

15) Leszek Kolakowski,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solu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451.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은 무엇보다도 권력의 분권화를 촉진함으로써 경쟁적인 정치세력의 형성을 용이하게 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sup>16)</sup> 스탈린이 공식적인 국가기구를 무시하고 비밀서기국을 통해 통치함으로써 권력분산을 방지한 것과는 달리 후르시초프 치하에서 당무는 상임위원회와 서기국이, 정부업무는 내각이 각각 수행해 나갔다.<sup>17)</sup>

소련에서 꾸준히 개혁파가 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최고권력자의 교체였다.<sup>18)</sup> 소련의 역대 권력교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특이한 현상은 전임자가 후계자로 선택한 사람과 실제로 권력을 승계한 사람이 달랐다는 점이다. 레닌은 스탈린을 원치 않았으나 스탈린이 집권했고 스탈린은 말렌코프를 선호하였으나 후르시초프가 집권했다. 후르시초프는 브레즈네프를 후임자로 지목하기는 했으나 자기를 축출하리라고는 생각치 않았으며, 브레즈네프는 체르넨코를 선호하였으나 안드로포프가 집권했다. 안드로포프는 고르바초프를 선호하였음에도 체르넨코가 집권하였고, 체르넨코는 그리신이나 로마노프를 염두에 두었으나 고르바초프가 집권했다.<sup>19)</sup> 이러한 현상은 당

---

16) Ibid., p. 455.

17) 송택구·조범순, 「현대 소련정치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8), pp. 65~72.

18) 안병만, “소련 권력엘리트의 구성과 내부정치,” 「중소연구」, 제10권 2호 (1986 여름), p. 90.

19) George W. Breslauer, “From Breznev to Gorbachev: Ends and Means of Soviet Leadership Selection,” in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p. 49.

연히 권력의 승계자가 전임자의 정책을 비판하고 대안적인 노선을 선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즉 스탈린을 계승한 후르시초프는 개혁적이었고 브레즈네프는 보수적이었으나 안드로포프는 개혁적이었으며 체르넨코는 다시 보수로 회귀하였으나 고르바초프는 개혁을 추진하였다.<sup>20)</sup>

소련에서의 체제변화는 1985년 3월 고르바초프가 본격적인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원래 페레스트로이카는 경제개혁을 위한 것이었으나 이내 경제적 토대로부터 상부구조에 이르기까지 사회구조 전체에 걸친 ‘위로부터의 체제개혁’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페레스트로이카는 심각한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하여 경제개혁을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경제개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에 의해 정치개혁이 추진되어 점차 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으로 진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소련의 개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세력은 누구인가? 그것은 고등교육을 받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젊은 개혁지향적 성향의 관료들이었다.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 소련 정치의 가장 현저한 특색은 짧은 시간내에 대규모의 권력엘리트 교체가 있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은 권력엘리트의 급속한 교체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려는 개혁파가 안드로포프의 집권 이후 점차 세력을 장악한 데에 기인한다. 즉 권력엘리트의 급격한 교체는 정권안정이나 인맥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의 필

---

20) Ibid., p. 48.

요성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며 고르바초프 개인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치국의 개혁과 다수에 의한 것이다.<sup>21)</sup>

사회주의체제의 발전과정에서 권력엘리트로 충원되는 인사의 특징은 시기별로 상이하다. 체제형성기에는 정치적 충성심과 혁명적 이념을 강조하는 당성이 권력엘리트 충원에 가장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만 체제가 안정국면에 접어들어 체제관리와 경영이 주요 과제로 등장하면 권력엘리트 충원에 있어서도 당성보다 전문성이 중시되는 경향이 있다.<sup>22)</sup> 사회주의 발전 초기에는 노동력 동원에 의한 경제발전을 시도하고 그것이 어느 정도 성공을 하게 된다. 그러나 공업화가 진행됨에 따라 이념과 열정에만 의존하는 발전전략은 한계를 드러내게 된다. 즉 미래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의 극복은 허구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인민의 물질적 욕구는 커진다. 인민의 의식이 외형적 발전에서 내형적 발전의 단계로 옮겨감에 따라 지도자들은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혁명 1세대를 서서히 또는 급격히 퇴진시키고 2, 3세대 가운데 전문기술관료를 등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sup>23)</sup>

따라서 소련에서도 산업화와 사회적 영역의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정치사회의 관리라는 체제의 필연적 요구로 인하여 전문

21) 안병만, "소련 권력엘리트의 구성 및 내부정치," p. 90.

22) William A. Welsh,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 in Carl Beck, ed.,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1973), p. 42.

23) 정종욱, 「신중국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pp. 92~93.

가 유형의 관료직을 대량으로 충원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스탈린 사후 두드러졌다.<sup>24)</sup>

물론 대체로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관료는 국가체제가 정착되면서 국가나 지배계급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집단이 되어 간다.<sup>25)</sup> 예컨대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처럼 개혁의지를 상실하고 명령의 중개자로 전락하여 보수화한다. 이들은 자포자기적인 무사안일에 빠지게 되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새로운 계급'으로 부상하여 사회 위에 군림하게 된다. 결국 이들은 본래의 사명인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관료가 아닌 지배자와 자신의 이익만을 위한 관료집단이 되어 제반가치를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상화하는 성향을 띄게 된다.<sup>26)</sup>

그러나 이들의 성향이 현실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을 뒷받침한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을 검토한 결과 두드러지는 점은 그들이 비교적 젊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정부쪽 출신이라는 것이다.

소련에서도 고르바초프 집권 이전까지는 권력엘리트들이 고

---

24) William A. Welsh,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 p. 42.

25) 김광웅, "국가관료의 정책이해,"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pp. 294~300.

26)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p. 132.



명화되어 있었으나 고르바초프 등장 전후에는 권력집단이 눈에 띄게 연소화되었다. 예컨대 당 중앙위원회 정위원의 평균연령은 1952년에 55세, 1964년에 61세, 1982년에 69세로 점차 상승하다가 1986년에는 64세로 젊어졌다.<sup>27)</sup>

그리고 후보위원까지 포함된 숫자이기도 하지만 중앙위원 전체에서 대학교육 이수자의 비율이 1971년의 54.8%, 1976년의 60.0%, 1983년 70.6%로 점차 증가하고 있어 권력엘리트에서 전문교육을 받은 인물들의 비율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고등교육 이수자의 증가는 일차적으로 고등교육 수혜자의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결과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증가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은 집권자의 교체와 이에 따른 정책변화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보인다.<sup>28)</sup>

또한 권력엘리트의 직업경력의 변화여부는 그들이 지향하는 정책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소련의 개혁을 추진한 인사들은 정부쪽 엘리트들이 많았다. 정부 엘리트들은 일반적으로 같은 수준의 당료들에 비해 실용주의적인 반면 이념적인 면이 약했고<sup>29)</sup> 그 결과 당료들과 각계의 전문엘리트 사이에 중요한 정책문제에 관해 의견차이

27)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 120.

28) 위의 책, p. 126.

29) 위의 책, p. 97.

가 있었다.<sup>30)</sup>

결국 고르바초프의 집권 이래 소련 권력엘리트의 집단적 성격은 특히 연령구조나 학력과 같은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일차적으로 최고지도자의 교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고르바초프의 등장은 체제의 핵심적 권력엘리트의 성격을 변화시켰다. 연령의 저하나 고등교육을 받은 인물들의 증가추세, 그리고 당 및 군부 출신의 비율이 감소되는 반면 정부기관 출신이 증가하는 추세는 체제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지향적 인물보다 전문적 기술이나 학식을 가졌으며 젊고 개혁지향적인 인물들이 등장한 결과 소련에서 체제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다.<sup>31)</sup>

#### 나. 중국의 개혁과

중국의 경우도 소련과는 유형이 다르기는 하지만 파벌주의와 노선갈등을 경험하였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대실패는 모택동의 중국적 사회주의를 뿌리채 뒤흔드는 충격을 가져다 주었고, 결과적으로는 중국의 개혁정치가 등장할 수 있게 한

30) Milton Lodge, "Attitudinal Cleavage with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Beck, ed.,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pp. 202~225.

31)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 권력엘리트 연구」, p. 136.

배경요인이 되었다.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말미암아 중국의 권력엘리트들과 지식인 사회에서 모택동의 지도력에 대한 회의와 비판이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대약진운동의 실패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실무관료들을 중심으로 하는 실용주의적 정책노선이 형성됨으로써 문화대혁명 이전에 이미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에서 미묘한 노선투쟁의 양상이 노출되었다. 이같은 지도부 내부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은 마침내 문화대혁명으로 폭발하였고 중국공산당 지도부 내부의 분열과 갈등은 중국사회 전체에 확산됨으로써 '천하대란'의 상태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격렬한 정치적 혼란과 갈등, 사회적 균열 속에서 모택동과 좌파들에 의하여 숙청당했거나 피해를 받은 당과 국가기관의 간부들과 지식인들, 그리고 일반대중들의 반좌파적 성향이 등소평의 역사적 노선전환의 배경이 되었다. 이런 점에서 등소평의 개혁은 모택동 시대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1970년 초 임표의 군부세력이 숙청된 이후 중국정치는 문화대혁명의 이념과 정책을 대변하는 문화대혁명 4인방 및 그들의 추종세력과 주은래 및 임표사건 이후 복권된 등소평이 대표하는 실무관료계급들이 대립 축을 형성하여 이 두 세력간의 노선투쟁과 권력투쟁이 지속되었다.

등소평이 복권되면서 등소평을 중심으로 모택동 시대에 박해를 받았던 광범위한 구관료와 당간부들, 그리고 지식인들이 반

좌파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하였고,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이 개혁연합세력은 비교적 짧은 시간내에 순조롭게 당과 국가의 지도부를 장악했다.<sup>32)</sup>

중국정치에서 파벌이 형성되고 노선투쟁이 가능했던 데는 몇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째, 오랜 혁명투쟁과정에서 형성된 중국 지도층의 일체감과 동료의식이 권력투쟁과정에서도 과격한 숙청을 방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sup>33)</sup>

둘째, 모택동의 모순론에 의해 중국정치에서는 집권자들이 반대의견을 가진 집단의 존재를 인정해 주는 것이 관례였다.<sup>34)</sup>

셋째, 중국도 혁명1세대 출신 최고권력자의 권력교체를 경험했다. 중국에서 모택동으로부터 화국붕과 등소평으로 이어지는

32) 이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등소평이란 구심점이 존재해 등소평을 중심으로 다양한 반좌파세력이 단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만 문화대혁명과 좌파들의 교조주의적 정책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과 경제생활의 개선을 바라는 대중들의 지지에 힘입은 바 컸다.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p. 362.

33) 오명호, “중국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중소연구」, 제10권 1호 (1986 봄), pp. 112~113.

34) 모택동의 모순론에 의하면 모든 모순은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이라는 두 가지 형태를 취한다. ‘적대적 모순’은 적과 우리 사이에 발생하며 그 모순은 적을 타도함으로써 해결되나, ‘비적대적 모순’은 노동자와 농민 사이에서처럼 인민상호간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그 해결은 ‘대립통일의 법칙’에 따라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다. 대립통일의 법칙이 조직의 형성과 관리에 적용될 때는 항상 반대의견의 존재를 인정하고 비록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그것을 존중해 주는 입장으로 나타난다. 위의 논문, p. 113.

권력교체 후 비로소 체제변화가 있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모택동 사후 화국붕이 등장하면서 경제개혁이 시작되었으나 중국의 개혁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화국붕이 권좌에서 밀려나고 등소평체제가 등장하는 과정에서부터라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등소평의 대담한 경제개혁과 개방정책을 뒷받침한 세력 역시 상대적으로 젊은 전문기술관료였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개혁파는 1982년 12차 전당대회 이후 당과 국가의 영도간부에 대한 세대교체 작업을 추진하였다. 그들은 간부의 노화현상을 극복하고 현대화와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젊고 고등교육을 받은 전문적인 실무간부의 등장이 요구된다는 명분 아래 신진 기술관료들을 대거 발탁했다. 특히 1985년의 임시 당대회에서 이같은 세대교체 작업이 당과 국가의 고위급으로까지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노간부들이 제2선으로 물러나고 호요방, 조자양, 이붕과 같은 이른바 제2梯隊의 인물과 40, 50대의 제3세대에 속하는 신진세대들이 당과 국가를 영도하는 지위로까지 진출하게 되었다.<sup>35)</sup>

중국 역시 건국 직후 체제강화기에는 간부임용 기준으로 德과 함께 이념성인 ‘紅’을 강조하였으나 체제가 안정되어 가자 모택동은 간부의 기준으로 ‘才’와 ‘德’을 제시하였다. 특히 재능

35) 서진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서진영 편, 「현대중국의 정치와 사회변동」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pp. 78~95.

과 ‘專’은 실용주의 노선을 채택한 등소평시대에 들어 체제발전에 필요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한층 강조되기 시작하였다.<sup>36)</sup>

따라서 중국의 개혁도 젊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전문적 지식을 갖춘 관료들 중심으로 추진되었고, 이들은 당 중앙위원으로 대거 진출하였다. 물론 현재까지는 여전히 고령의 인물들이 핵심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위원의 평균연령은 1982년의 71세에서 1987년의 58세로 대폭 낮아졌는데<sup>37)</sup> 이는 등소평의 ‘年輕化’政策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1982년까지 중앙위 위원들이 고령화되어 왔던 것과 대비된다.

한편 학력을 볼 때 대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권력엘리트 집단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전문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 등소평은 집권 이후 새로운 간부정책으로 ‘지식화’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11전대회(1977)에 당 중앙위 정위원에서 대학교육 경험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5.7%였던 것이, 12전대회(1982)에서는 55.4%로, 13전대회(1987)에서는 73.3%로 급증했다.<sup>38)</sup> 이와 같은 정책은 1980년대

36) James R. Townsend,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 Co., 1974), pp. 244~245.

37) Hong Yo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p. 267.

38) Li Cheng and Lynn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ian Survey*, vol. 28, no. 4 (1988),

들어 지방의 간부에까지 확대되어 12전대회 이후 省級 간부들 가운데 대학 이상 학력의 보유자 비율이 43%로서 이전 시기의 2배 이상이나 된다.<sup>39)</sup>

또 하나 등소평 집권 후에 중점을 둔 간부정책의 하나는 '전문화'이다. 정치국원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11전대회(1977), 12전대회(1982), 13전대회(1987)에서 당 출신 비율은 31%에서 21%, 17%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정부출신은 27%, 50%, 72%로 급격히 늘어났다.<sup>40)</sup> 당 중앙위원의 경우도 비슷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11전대회에서 당료출신은 48.8%였으나 12전대회에서는 47.6%로, 1985년에는 37.5%로 감소하고 있으며, 정부기관 출신은 같은 기간에 17.4%에서 30.4%, 39.3%로 증가하고 있다.<sup>41)</sup>

요컨대 등소평의 집권 이래 '年輕化,' '지식화,' '전문화'의 신 간부정책에 맞추어서 당 중앙위원의 집단적 성격이 커다란 변화를 보였는데, 이는 개혁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전문기술관료들을 발탁한 데 연유한다.

---

p. 379.

39)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125~126.

40) Cheng and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p. 383.

41)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 132.

## 2. 아래로부터의 변화: 지식인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와는 완전히 다른 과정을 거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정권내 개혁세력이 미약하거나 존재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정권내 지배집단은 체제변화에 강력히 반대하는 현상유지자들이기 때문에 개혁은 반정부세력이 국민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반면 정부가 강제력을 상실하여 정부가 와해되거나 타도된 결과로 발생한다.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는 시민사회의 성장이 필수적이고, 이 과정에서 지식인의 역할은 다대하다.

### 가. 시민사회의 성장

시민사회라는 개념은 역사적으로 상이하게 해석되어 왔으나<sup>42)</sup>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를 설명할 때의 그 기본 개념은 체제의 구성원들이 정권에 의해 후원되는 공식적 구조와 패턴의 바깥에서 가능한 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지하신문을 발행하고 읽는 것, 암시장이나 사적 시장과 같은 제2경

42) 역사적으로 시민사회의 개념이 어떻게 이해되어 왔는가에 대해서는 Robert F. Miller,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An introduction,"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pp. 1~10 참조.



제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것, 야학과 같은 비공식적인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것, 교회처럼 정치당국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조직체를 지지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출현은 사회주의체제에서 정치적 활동이 국가에 의해 일차적으로 시작되고 통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정치적 성격과는 무관한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독립적 활동을 추구함으로써 체제의 구성원들은 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대안사회’ 또는 ‘제2사회’의 형성에 기여하고, 이런 시민사회가 성장함에 따라 국가의 힘은 줄어들어 결국 공식적 구조가 시민사회에 의해 대체된다는 점에서 분명히 정치적 활동과 관련되어 있다.<sup>43)</sup>

전체주의사회에서 시민사회가 등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자율화가 진전되어야 한다. 즉 시민사회는 이념적 통제와 국가의 탄압이 어느 정도 완화되는 후기전체주의(post-totalitarianism) 사회에서 등장한다.<sup>44)</sup> 결국 시민사회란 국가통제가 완화되고 이데올로기적 억압이 쇠퇴한 결과로서 야기된 후기전체주의적 질서 속에서 “개인과 집단들이 자신들의 특별한 관심사를 추구함에 있어 국가의 명령구조와는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상호

43) Leslie T. Holmes, "The GDR: The search for autonomous patterns of development," in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p. 69.

44) Vladimir Tismaneanu,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p. 170.

작용하는 구조와 절차로 구성된다.”<sup>45)</sup>

물론 정치적 전통과 사회통제의 차이에 따라 나라마다 시민 사회의 성장속도는 상이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에 자율적인 사회결사체의 등장을 가져오는 사회구조의 분화가 필요하다는 점만은 어느 곳이든 동일하다. 즉 시민사회의 발달에는 도시화, 직업의 분화, 교육수준의 향상, 세대교체, 감시체제의 이완, 제2경제의 발달 등이 필요하다.<sup>46)</sup> 이러한 요인들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소련에서의 시민사회 성장 배경을 분석한 스타(S. Frederick Starr)의 설명으로 충분하다.<sup>47)</sup>

스타에 의하면 도시에서의 생활은 집단농장에서의 생활보다 개인을 사회통제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즉 도시화는 인구집중과 개인생활의 다양화를 촉진하기 때문에 도시주민에 대한 국가의 감시가 효율성을 잃게되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어렵게 되었다는 것이다.

---

45) T. H. Rigby, "The USSR: End of a long, dark night?"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p. 14.

46) S.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Affairs*, no. 70 (Spring 1988), pp. 26~41; Moshe Lewin, *The Gorbachev Phenomenon: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H. Gordon Skilling,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 Macmillan, 1989), 특히 7장 참조.

47) S. Frederick Starr,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Affairs*, no. 70 (Spring 1988), pp. 26~41.

또한 직업의 분화와 교육수준의 향상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한 소수의 기술 및 전문지식의 독점현상을 약화시킨 반면 개인주의화와 개인적 자율성을 증대시켰고,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은 당국의 통제를 넘어 시민들간에 자발적 조직들이 형성되게끔 했다는 것이다. 결국 스타의 결론은 소련의 경우 1980년대 초반에 사상의 주도권마저 국가에서 사회로 넘어가게 되었을 뿐 아니라 국가가 위로부터 사회적 가치를 형성하여 주입하는 것도 한계에 봉착하게 되었고, 이러한 사회적 변화들이 고르바초프로 하여금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는 기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였다는 것이다.

시민사회의 성장이 체제전환의 결정적 동인이 된 사례는 동유럽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물론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에서도 국가가 사회에 대한 절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탈전체주의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약화되어 여러 결사체들이 등장하였는데, 이러한 단체들은 초기의 경우 여전히 국가의 통제하에서 제한된 자율권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시민사회가 국가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집단의 존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면 이들 자율적인 단체의 형성은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된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야 하므로 그 활동은 사회주의 국가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즉 시민사회 형성 초기 일당지배 체제의 국가는 정치·경제영역에서 통치권을 유지하는 반면, 독

립적인 시민단체는 사적이고 지역적인 이해를 표출하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점차 국가의 정통성 및 권위에 도전하면서 성장하게 되고 국가와 시민사회 간의 균형은 시민사회세력이 대안의 통치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함으로써 결정적으로 깨어지게 되는 것이다.

동유럽 사회주의체제의 변화에 시민사회가 미친 영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반체제 인사 및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대항적 사회세력들이 대안적 정치세력으로 등장하게 한 것이다.

제2차세계대전 이후 공산당 일당지배체제를 수립한 동유럽국가들은 1980년대 말까지 이 체제를 유지하였다. 동유럽 국가들이 경제적 낙후에도 불구하고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엘리트 및 인민들의 묵시적 동의가 있었고, 지배엘리트들이 국가 통치수단을 동원해 반체제엘리트들에 의한 체제비판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소련에서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진행되고 주변 선진국 및 신흥공업국가들의 실상에 대한 정보가 동유럽 주민들에게 점차 광범하게 유포되면서 기존체제에 대한 불만과 개혁여론이 확산되어 체제유지의 위기를 맞게 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이 체제유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 이유는 지배엘리트들이 체제에 대한 정통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정권은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정치사회화과정을 통해 정통성을 강화한다. 전적으로 위

협이나 힘에 의존하는 정권이란 없다. 동유럽 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명목적인 것이긴 하지만 정치 사회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sup>48)</sup> 체제성립 초기에는 이 세 가지가 비교적 잘 기능하였다. 공산주의에 대한 상당한 지지가 있었고 투표 등을 통해 정치과정의 주민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정권에 대한 신뢰성을 획득할 수 있었으며 초기에 거둔 사회·경제적 성공이 정치적 정통성 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정치적 정통성의 기반이 된 이들 자원들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하나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르크스나 심지어는 레닌의 이상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치체제 및 사회에 혐오를 느끼기 시작했다. ‘신계급’이 생겨나고 참여도 강제적 성격을 띄게 됨으로써 정치적 정통성은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에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사회발전이 답보상태에 빠지게 되자 정통성의 이 기반마저 무너져 버렸다.

서구의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정부가 항상 경제침체의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종종 시장메카니즘의 불가피한 결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정부

---

48) David S. Mason,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p. 34.

가 경제를 통제하기 때문에 경제가 악화된 데에 따른 모든 비난이 정부에게 집중된다.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채택한 사회주의 계획경제는 경쟁상대인 자본주의경제를 따라잡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적인 요구마저 충족시킬 수 없었다. 중앙집권화된 관료체제는 창조적 적응력을 질식시켜 버렸고 생산계획은 인간의 욕구 충족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무시해 버렸으며 인적·물적 자원의 엄청난 낭비를 초래했다. 이런 실패는 결국 생산을 합리적으로 조직하는 체제의 능력에 관한 정통성을 뒤흔들어 놓았다.<sup>49)</sup>

이처럼 체제위기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동유럽 각국별로 체제에 대한 대항세력이 꾸준히 성장하여 체제전환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사회가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의해 이념적으로 지도되고 공산당의 유일적 영도하에 수직적으로 획일화되어 있을 때는 시민사회가 성장할 수 없었다. 그러나 체제의 정통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체제의 효율성이 하락하면서 체제에 균열이 발생하자 서서히 시민사회가 성장하기 시작했다.<sup>50)</sup> 동유

---

49) 동유럽에서 공산정권이 갑자기 붕괴하게 된 원인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거의 모든 연구들은 정통성의 상실과 현대화에의 실패를 지적한다. Walter Connor, *Socialism's Dilemma: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Blo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Joni Lovenduski and Jean Wodall, *Politics and Society in Eastern Europ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William E. Griffith, ed.,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Opening Curtain?* (Boulder: Westview Press, 1989) 참조.

럽에서 시민사회의 성장은 곧 반사회주의의 성장을 의미했다.

경제와 정권이 1970년대에 악화되면서부터 반체제세력은 점차 적극적이고 가시적이 되었으며 대중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기 시작했다. 동유럽 국가의 경우 2차대전 이전에 민주주의를 실시한 경험이 있었고 통치의 성격이 스탈린정권보다 덜 가혹했다는 점에서 반체제운동은 강력하고 지속적이었다.<sup>51)</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항운동은 주로 비교적 적은 지식인집단에 국한되어 있었고 노동자의 저항이나 파업은 극히 드물었다. 저항운동이 활력을 얻게 된 계기는 소련이 1975년에 「헬싱키협정」에 서명한 것이었다. 소련이 이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소련에서는 물론 동유럽에서도 반체제 지식인들이 인권침해를 고발하는 다양한 종류의 인권감시단체를 결성하게 되었다. 이들은 ‘사미즈다트’라는 지하신문의 발행을 통해 정치적 박해와 인권침해 사례를 고발하였다. 폴란드의 경우 1980년대 중반에 2천여 종류의 지하신문이 정기적으로 발행되었고 일부는 발행부수가 수 만부에 이르렀다. 체코에서도 일단의 지식인들이 「77헌장」을 통해 체코법과 헬싱키협정에 의해 보장된 인권을 수호하도

---

50) 동유럽, 특히 중부유럽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은 소련에서의 시민사회의 성장과는 일정한 차이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Marcia A. Weigle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e,”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1 (October 1992) 참조.

51) Robert Sharlet, “Dissent and the Contra-System in East Europe,” *Current History*, vol. 84, no. 505 (November 1985), pp. 353~355.

록 국민들에게 촉구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반체제운동의 강화에 기여했다. 첫째, 특히 ‘사미즈다트’를 통한 저항의 표출은 “개인을 움직이지 못하게 한 공포”를 없애줌으로써 저항운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동참을 자극했다. 둘째, 사미즈다트 네트워크는 정권의 정보독점을 파괴하고 “대안적이고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 체계”를 형성해 주었다. 셋째, 통제된 정치환경 속에서의 정치적 저항은 “사회생활의 점진적인 재개인화”를 야기함으로써 국가통제와는 독립된 활동영역을 확장시켜 주었다. 바로 이것이 ‘시민사회’라는 개념의 일부이자 국가에 대한 도전의 첫걸음이었다.<sup>52)</sup>

#### 나. 지식인의 역할<sup>53)</sup>

동유럽에서 가장 먼저 조직적으로 그리고 정치적 의미를 지닌 채 등장한 시민사회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운동이라 할 수 있다. 1980년부터 조직화되기 시작한 폴란드의 「자유노조」는 8백만명 이상이 가입한 대규모의 노동조합으로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였다. 폴란드에는 일찍부터 교회, 지하 시민단체 및

52) Ibid, pp. 355~356.

53) 이 부분은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pp. 269~281을 주로 참고하였다.



강력한 노동조합 등이 사회세력으로 존재하면서 국가의 일방적, 독점적 지위에 대해 도전하였으나 「자유노조」가 처음부터 정부에 대하여 정치적 성격의 요구를 제기한 것은 아니었다. 초기에 「자유노조」측이 정부에 제기한 요구사항 등은 공산당 집권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보다는 공산당 지배체제 테두리 내에서 시민의 권리와 「자유노조」의 활동을 용인받으려는 것이어서 타협적 자세를 견지하고 있었다. 계엄령이 선포되고 「자유노조」가 불법화된 상황에서도 이러한 기본 입장과 자세는 일관되게 유지하였다. 그러나 국가가 1970년대 말부터 위기에 봉착하여 사회집단들의 활동에 대한 더 많은 자율권을 허용함으로써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여 가자 「자유노조」도 출판,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기본적인 정치적 자유의 확대를 요구하게 되었고 이 과정을 주도한 인물들은 지식인이었다.

한편 헝가리의 시민사회는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같은 강력한 시민사회 단체가 존재하지 못했으므로 상대적으로 미약한 상태였다. 따라서 정부에게 법률을 준수하고 사회단체의 자율성을 제고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였다. 1987년에 와서야 주로 지식인들로 구성된 시민사회 단체들은 국가에 대하여 국가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러한 요구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난 변화임에는 틀림없지만 헝가리 시민들은 1956년의 인민봉기 실패를 기억하고 있었으므로 자신들의 행동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매우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하면서 국가와의 초보적인 권력분점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하였다. 이같은 배경에서 체제변화를 요구하는 소규모 시민단체들이 1988년 말 경에는 무려 50여 개가 결성되어 그들의 집약된 의사를 보다 조직적으로 표출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시민단체의 대부분은 불과 수십명 내외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그것도 부다페스트에 근거지를 둔 지식인들 뿐이었다.<sup>54)</sup>

1988년 경에 헝가리에서 시민단체의 수가 급증한 것은 경제사정의 악화에 그 원인이 있었다. 헝가리의 경제상황은 그 무렵 높은 인플레이션과 실업증가라는 이중고에 시달려 거의 파산상태에 이르렀는데,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시민단체의 지지와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조직화할 수 있었던 대표적인 시민단체가 구성원이 각각 1만명과 1500명 정도인 「민주포럼」(Democratic Forum)과 「자유민주주의동맹」(Alliance of Free Democrats)이었다.<sup>55)</sup> 「민주포럼」은 160명의 민중작가들을 중심으로 한 온건 지식인이 1987년 결성한 것이고, 「자유민주동맹」은 1970년대의 반체제 지식인들이 주축이 된 조직이었다. 이 밖에도 과거 「자유네트워크」(the Network of Free Initiatives)의 후신으로서 정치적

---

54) Laszlo Bruszt and David Stark, "Remaking the Political Field in Hungary: From the Politics of Confrontation to the Politics of Competition,"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p. 23.

55) Ibid., pp. 30~31.

개혁을 주창하는 젊은 법학도들이 「청년 민주주의자 연방」(Federation of Young Democrats)을 결성한 것을 비롯, 1988년 말까지 과학과 문화분야의 전문직 종사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였다.

동독의 경우도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단체들이 1980년대에 루터교회 주위에 모여들었다. 1989년 동유럽이 변화의 소용돌이에 빠질 때 동독의 지식인, 환경보호 운동가, 여성운동가, 교회 종사자들은 9월 10일 「뉴포럼」(New Forum)을 결성하여 체제 개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여기에는 「민주주의 실현」(Democracy Now)과 「좌익연합」(United left) 등도 동참하였다. 지식인들이 중심이 된 시민단체와 교회가 시민들의 반정부 시위를 주도하였고, 이는 집권층으로 하여금 시급히 결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드는 엄청난 압력으로 작용하였다.

체코에는 1977년 「헬싱키협정」의 준수를 요구하기 위해 지식인들이 결성한 「77헌장그룹」과 「부당하게 박해받는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모임」(Committee for the Defense of the Unjustly Persecuted)이 있었으나 워낙 소규모여서 대중적인 조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다. 1987년에야 비로소 반체제 인사들이 정치적 목적을 띤 「민주화추진회」(Democratic Initiative)를 결성하여 정치적 자유화 및 개혁을 정부에게 활발히 요구하기 시작했다.<sup>56)</sup>

56) Tony R. Judt, "Metamorphosis: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체코의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대항세력화한 것은 프라하에서 학생, 시민들이 대규모의 집회와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1989년 11월 중순이었다. 11월 19일 프라하의 한 극장에서 반체제 작가인 하벨을 비롯한 지식인들이 「시민포럼」(Civic Forum)을 결성하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슬로바키아공화국에서도 작가와 예술가들이 중심이 되어 「반폭력민중」(Public against Violence)을 조직하여 시민들의 반정부 쉼기를 선도하였다. 「시민포럼」과 「반폭력민중」이 주축이 된 시민사회세력은 11월 27일 전국적인 파업을 극적으로 성공시킴으로써 공산당 유일체제를 대체할 세력으로 급부상하였다.

발칸지역의 루마니아, 불가리아, 알바니아는 철저한 통제와 대외고립화정책의 추진으로 시민사회가 성장하지 못했다. 대표적 고립국가인 불가리아의 경우 지브코프의 가부장적 통치와 지식인들에 대한 당의 철저한 통제 때문에 지식인 중심의 시민사회는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체제에 대해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기회를 엿보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고 체제개혁을 요구하거나 체제에 저항하는 행태는 보여주지 못했다. 종교계 역시 체제문제에 대해 적극적이기 보다는 국가의 정신적 지주로서 종교적 문제에 국한된 활동을 함으로써 시민사회의 세력화 또는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나 1989년에는 이웃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혁에 관한 소식이 전파

---

Czechoslovakia,"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97.

와 방문자를 통해 주민들에게 전달되었을 뿐 아니라 극심한 경제사정의 악화로 인해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은 높아갔다. 하지만 불가리아의 시민사회는 1989년 11월 10일 쿠데타 이후에야 비로소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각종 정당, 협회, 연맹 등이 속속 설립되어 정치화하였다.<sup>57)</sup>

그렇다고 해서 불가리아의 경우 체제변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영향을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철저한 통제상황을 감안할 때 극소수 인사에 의한 저항운동은 엄청난 의미와 파급효과를 가질 수 있다. 젤류 젤러프(Zhelyu Zhelev) 같은 반체제 지식인은 1988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를 지지하는 모임」을 결성하여 극히 소규모의 민주화운동을 전개한 바 있다. 당시는 큰 역할을 하지 못했으나 결국 그는 불가리아의 민주화가 달성된 후 대통령으로서 체제전환의 주역이 되었다. 이 점에서 불가리아의 시민단체운동은 조직화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했을 뿐이지 체제변화에 그것이 미친 영향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

루마니아에서도 국제적 고립과 차우세스쿠의 철저한 탄압통치 때문에 정권에 대항할 세력이 형성되지 못했다. 차우세스쿠는 자신의 권력에 도전하는 어떤 정치세력, 집단, 인물도 허용

---

57) Maria N. Todorova, "Improbable Maverick or Typical Conformist? Seven Thoughts on the New Bulgaria,"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164.

하지 않았다.<sup>58)</sup> 이렇게 특별한 대항세력이 존재하지 않던 루마니아에서 라즈로 퇴케스 목사가 당국에 의해 전격적으로 체포되자 1989년 12월 16일 민중봉기가 폭발했고, 봉기가 확산되면서 지배층의 분열을 자극했다. 돌발적인 민중봉기는 그 동안의 침체된 경제, 국제상황 변화, 주변국의 변화에 관한 정보의 유입 등이 합쳐져서 12월 21일부터는 대규모로 확대되었다.

알바니아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된 것은 1990년 초 대표적인 과학자, 기술자, 작가, 언론인 등 지식인들이 체제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감행하면서부터이다. 알바니아 정부는 철저한 고립정책을 통해 주변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에 관계없이 사회주의를 고수하고자 하였으나 루마니아 사태와 유고슬라비아내 알바니아 소수민족 지역의 개혁 움직임은 알바니아인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대학생과 청년 노동자들이 공산당 일당체제의 폐지를 포함한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 이것이 더욱 거세게 확산되면서 시민사회의 대정부 규탄강도는 급속도로 증가했다.

동유럽 각국의 체제변화는 각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와 결과에 도달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대항세력인 시민사회와 집권 공산당과의 협상을 통해 총선거를 실시할

---

58) Katherine Verdery and Gail Kligman, "Romanian after Ceausescu: Post-Communist Communism," in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p. 118.

것을 합의함으로써 체제전환을 이룩하였다. 동독, 불가리아, 알바니아 등에서는 집권자의 폭력과 이데올로기에 의해 무력해진 시민사회가 자신의 이익을 표출하는 방법으로서 대규모 국외탈출과 같은 이탈방식을 택함으로써 체제에 대한 불만과 저항을 표출했다. 그리고 폴란드의 「자유노조」와 같이 공개적이고 조직적인 대항세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체코의 시민들은 침묵을 지켰으나 주변 국가에서 변화가 있자마자 일순간에 탄압체제에 대한 저항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했다.

그러나 침묵과 복종으로 간주되던 비정치적 사회가 자신들의 의사를 표출하고 그 의사를 순식간에 결집시켜 정치사회로의 혁명적인 전환을 한 데는 지식인들의 역할이 컸다. 비록 조직화되지는 못했지만 소수의 지식인들이 보여준 체제에 대한 도전과 이들에 의해 운신의 폭이 급격히 늘어난 시민들의 집단적 저항, 집회, 시위가 있었기에 궁극적인 체제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sup>59)</sup>

---

59) Tymur Kuran,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pp. 16~26.

## 제Ⅲ장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 1. 위로부터의 변화: 전문기술관료

#### 가. 변화의 가능성

북한체제의 변화도 변화의 주체로 보면 위로부터의 변화와 아래로부터의 변화로, 변화의 내용에 따라서는 체제내의 변화와 체제전체의 변화를 상징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현 상황에 비추어 단기적으로 볼 때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없다. 북한이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일별해 보면 이같은 단정적인 결론이 분명해진다.

북한은 소련과 동유럽에서 개혁정책이 추진될 초기에는 매우 조심스런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개혁이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다당제 수용, 공산당의 정권 상실, 베를린 장벽의 붕괴 등 일련의 예기치 못한 사태가 일어나자 외부로부터 정보유입을 차단하고 소련 및 동유럽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우리식대로 살자’는 이른바 ‘우리식 사회주의’로 대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북한 현실에 적합한 독특한 사회주의를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당 이론잡지 「근로자」는 “복잡하게 조



성되는 혁명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처하여 혁명과 건설을 사소한 편향과 우여곡절도 없이 힘차게 추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식대로 살아갈데 대한 당의 혁명적 방침을 빛나게 관철해 나가야 한다”<sup>60)</sup>고 강조했다. 김정일도 1991년 5월 5일에 발표한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라는 담화에서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며 수령, 당, 대중이 일심단결된 사회주의”라고 주장했다.<sup>61)</sup> 이와 같이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 인해 상당한 충격을 받고 체제유지를 위한 예방조치로서 수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할 것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북한의 국가이념은 사회주의권의 변화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경제분야에서도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다원주의적 질서에 극히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의 변화의 조짐도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사망한 후에도 북한은 ‘유훈통치’라는 미명하에 노동당의 중앙집권적 통제와 주체사상의 이데올로기를 신봉하며 부자의 권력세습을 특징으로 하는 폐쇄적 체제를 유지하고 있어 러시아 및 중국이 오히려 개혁과 개방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60) 고태철,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 있는 전략적방침,” 『근로자』, 제10호 (1989), p. 19.

61)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제6호 (1991), pp. 3~25.

II장에서 이미 언급했듯이 위로부터의 변화에는 정권내 개혁파가 존재해 엘리트간에 파벌 및 노선갈등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여타 사회주의 국가와는 달리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지금까지 파벌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왔다.<sup>62)</sup> 첫째, 북한의 경우 중국이나 소련에서 나타났던 혁명1세대의 사멸과 권력교체가 없었다. 거의 반세기 동안 한 지도자가 장기 집권했다는 사실이 집권자가 선호하지 않는 엘리트들의 등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한 가장 중요한 원인이다. 둘째, 아들에게 권력을 승계하기 위한 준비작업이 지난 20년 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국이나 소련에서와 같이 전임자에 대한 격하운동이나 대안적 노선을 혁명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없다. 또 현재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김정일 후계체제로 공고화되어 있어서 엘리트집단 내에 파벌이 형성되기 어렵다. 지도자가 교체되면 새 정권이 통상 정당성의 기초를 과거 정권에 대한 부정과 비판에서 확보하는 경향이 많았는데 북한에서는 그것을 기대할 수 없다. 셋째, 소련에서 후르시초프의 스탈린 격하운동 이후 나타난 다원주의나 중국에서 모택동의 대립통일의 원칙과 같은 경쟁적 사상이 병존할 수 있는 토양이 북한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에는 유일사상, 유일노선만 있을 뿐이지 대안적 노선이란 허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의 권력엘리트 가운데 체제변화의 필요성을 절감

62) 민족통일연구원 편,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p. 635.

하고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변화의 동인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체제 자체의 비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였다면 북한도 결코 예외가 될 수 없다.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여타 사회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계획경제체제라는 점이다. 더욱이 북한은 자본주의권의 경제봉쇄에 놓여있을 뿐 아니라 현 지배집단의 권력유지의 논리가 경제의 논리를 매우 심하게 압박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우는 사회주의체제 그 자체가 주는 경제적 비효율성에 덧붙여 정권의 폐쇄주의 때문에 어느 사회주의 국가보다도 경제회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은 이러한 장애를 해소하지 않고는, 즉 경제의 논리가 정치의 논리에 종속되는 현실을 극복하지 않고서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지 못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체제전반에 걸친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변화 사례가 시사해 주고 있다. 사실 북한의 경제적 궁핍은 민중봉기의 수준에 다다르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민중혁명의 충분조건에 불과하다. 민중혁명을 위한 필요조건은 바로 북한 지도자들의 도덕적 허구성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인지이다. 김일성은 도덕적 지도력

을 발휘하여 왔으나 김정일은 상징조작과 전시효과적 정책만을 수행하여 왔을 뿐 아직 실질적인 정책적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 점에서 김정일은 김일성과 같은 카리스마를 지닌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아래로부터 정책변화에 대한 요구에 직면할 가능성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아래로부터의 불만이 심화되면 이를 무마하기 위해서도 김정일은 對주민 유화책을 쓰거나 경제를 더욱 빨리 희생시켜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빠른 시일안에 경제를 희생시키기 위해서는 개방을 피할 수 없고 개방은 체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렇다고 마냥 현상유지를 고집한다면 아래로부터의 반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요구가 조직화되기 전에 김정일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 길은 정책변화를 하는 것 뿐이다. 정책변화는 반드시 개방정책을 포함할 것이다. 북한이 부분적인 개방정책을 통해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보다 철저한 통제에 성공한다면 체제는 한 동안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장기적인 안목에서의 안정이 될 수는 없다. 경제성장과 사회적 변화는 주민의 보다 많은 자율성 요구라는 아래에서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여, 결국 사회주의체제의 경직성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은 일원주의 원칙에 따라 다원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데 있다. 즉 작은 변화로

막을 수 있는 대안이 없기 때문에 체제변화를 피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동유럽에서 정치변동이 갑자기 이루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북한에서 위로부터의 점진적인 변화 가능성이 있다면 그것은 체제내에 대안을 만드는 작업을 통해서이다. 체제의 붕괴를 가져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체제내에 작은 대안을 만들어 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회주의체제 속성 중의 하나를 변경하지 않으면 안된다. 엘리트들의 경쟁을 허용하든지 아니면 대폭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여 동의를 의한 지배영역을 확대하는 것이다.

결국 점진적 변화를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중국식으로 경제를 개방하여 어느 정도 동의를 확보하고 정치적으로는 더욱 더 통제를 증가시키는 것인데, 이 방법은 잠정적으로는 성공할 가능성이 높다. 성장이 꾸준히 지속되는 한 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이 때 체제에의 위협요소는 정보유입에 의한 사회로부터의 반발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서 사회로부터 조직적인 반발이 발생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즉 정보가 유입되어 주민이 국가이념과의 상충을 느끼게 되어 이것이 사회저변에 확산되어 조직화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북한정권은 산발적인 반발을 물리력으로 억누르면서 경제개혁을 추진하면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북한정권이 아래로부터의 반발에 버틸 수

있는 방법은 탄력성있게 조금씩 대안을 만들어 주면서 정권변모를 피하는 것이다. 지금처럼 전혀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의 반발이 일어날 경우 곧장 체제 자체에 대한 위협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sup>63)</sup>

따라서 현 상황에 비추어 북한에서 설사 위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래에서의 불만이 심화되어 마지못해 위에서 변화를 수용하는 형태가 될 것이며, 이는 체제유지를 목표로 한 정책대응적 내용을 가지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장기적 관점에 있다. 다시 말해서 본 연구의 핵심은 현재로서는 북한 내에 명확히 드러난 개혁파가 존재하지 않지만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그들의 등장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집단일까 하는 것에 있다.

개혁파의 등장을 상정할 수 있는 근거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사례에 비추어 북한에서 노선투쟁 및 엘리트간 파벌이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데 있다. 가능성을 언급할 수 있는 이유는 첫째, 김일성이라는 혁명1세대 최고 지도자의 사망이 중국이나 소련에서 체제변화에 미친 영향과 유사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고, 둘째, 후술하겠지만 현재의 경제위기나 대외적 고립을 해결하는 대책을 둘러싸고 대안적 정

---

63) 조기숙,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통일원 편,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 (서울: 통일원, 1993), p. 308.

책을 선호할 수 있는 전문관료의 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이러한 세력이 현재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주민의 불만 증대에 기인한 사회적 동요가 발생하거나 외부의 압력 등이 있을 때는 표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사실 김정일의 공식 권력승계는 축적되어 온 체제적 위기를 현실화시킬 것이며, 이 문제해결을 위한 권력층의 갈등을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집단이 개혁파로 성장해 위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을까?

#### 나. 전문기술관료의 성장

현재 북한 지도부는 우리식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사회주의의 기본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대내외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북한은 노동당의 일당지배를 견지하면서도 사회민주당과 천도교청우당의 존재를 인정하는 등 의견상 다당제를 수용하였다. 종래에는 이들 정당출신의 극소수가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으로 선출되었지만 1990년 4월에 있었던 제9기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 선거에서는 사회민주당 출신이 7.4%, 천도교청우당 출신이 3.2%, 무소속이 1.9%를 점하게 되었다.<sup>64)</sup> 이는 소련과 동

64)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1호

유럽의 민주화 추세를 의식한 정책적 배려이다.

경제적 차원에서도 대내적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하여 대외경제관계의 확대를 모색해 왔다. 1984년에 「합영법」, 1985년에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소득세법」 등을 제정하여 대외개방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1986년에는 「조선국영합영총회사」를 설립하여 외자유치에 노력하였으며 1991년에는 나진·선봉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하였고, 1992년에는 헌법의 일부를 수정하여 외국인의 합법적 권리 및 이익보장 관련 조항과 외국과의 합영 및 합작장려 조항 등을 신설하여 당면한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 경제개방정책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5일에는 「외국인투자법」, 「합작법」, 「외국인기업법」 등을 제정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태도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기존의 자력갱생 노선을 완전히 포기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대외경제관계에 있어서의 종래의 폐쇄적 입장을 다소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물론 북한의 이같은 제한적 변화는 본질적인 체제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기보다 대외개방의 파급효과를 극소화시켜 체제유지에 손상을 주지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경제난 해소정책의 일환으로서 추구하고 있다.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그 어떤 변화나 개혁적 조치일지라도 그것은 유일체제의 온존과 김정일의 권력



장악을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완수하는 데 그 초점을 맞추게 된다. 따라서 북한의 체제적 성격으로 보아 북한이 당면하고 있는 핵심과제를 일차적으로는 정치체제의 유지라고 볼 때,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개혁도 권력체제의 안정적 유지와 권력 승계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작은 변화의 누적이 예기치 않은 범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특히 경제난 타개를 위한 전문기술관료의 중용은 이들의 정권내 입지를 강화시켜 줄 것이다. 우리가 전문기술관료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들이 상대적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이 있다는 데 있다. 물론 북한의 전문관료는 김일성 부자에 대한 충성심이 높고 김부자의 권력 세습체제를 강화시켜 온 인물들이어서 체제개혁적 사고를 결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sup>65)</sup> 그리고 권력엘리트 충원원칙에 있어 김정일이 ‘유훈통치’를 표방하는 한 ‘충성심 우선, 당성·전문성 차선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도 충성심이 강한 관료만이 권력엘리트로 등용될 것이다.<sup>66)</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기술관료의 사회적 특징이 비교적 젊고 학력수준이 높으며 유학 등을 통해 해외생활 경험이 있다는 것은 북한체제 변화와 관련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해외여행 경험과 유학경험은 폐쇄된 북한체제에서 새로운

65)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 97.

66)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p. 46.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고 이를 통해 북한에 대한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북한의 당 중앙위원들을 권력엘리트를 선정해 분석한 한 연구<sup>67)</sup>에 의하면 북한의 권력엘리트 구조는 이미 변화하고 있다. 학력을 기준으로 할 때 대졸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데, 권력엘리트 집단의 학력 수준이 높아지는 현상은 전문화 경향과 연결되어 있다.<sup>68)</sup> 또한 중앙위 정위원의 거의 반 이상이 해외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시기별로 해외경험자의 비율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방문회수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sup>69)</sup> 해외경험자가 증가하고 이들이 고위직으로 진출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환경이 북한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중앙위원의 주요 전직을 시기별로 비교했을 때 당료출신의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반면 정권기관 출신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sup>70)</sup> 정권기관 출신이란 전문관료로서 정부내 주요 부서에서 실무를 기획·조정할 역량이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북한에서도 전문관료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혁명세대들이 아직 권력의 상층부에 있지만 이와 같이

67)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68) 위의 책, p. 124.

69) 위의 책, p. 129.

70) 위의 책, p. 132.

전문기술관료들은 수적으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권력 핵심부에도 등장하고 있다. 현재 정치국 위원 중 50%가 전문관료 출신이고 특히 후보위원인 경우에는 10명 전원이 전문관료 출신이다. 국가기관의 경우에는 전문관료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진다. 전문관료 출신인 이종욱이 부주석에 있으며 정무원 총리는 1977년 6차내각 이후 지금까지 경제전문가들이 자리를 맡아오고 있다. 중앙인민위원회의 위원 대부분도 전문관료 출신이다. 정무원은 총리 이하 10명 전원이 전문관료이다.

최고인민회의의 대의원의 경우에도 대졸 이상이 1982년 7기에서는 50.4%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1990년 9기에 들어와서는 68.2%로 증가하였으며 박사, 교수, 과학자, 기술자 등 전문관료로 분류될 수 있는 대의원이 반수 이상인 64.5%를 차지하고 있다.<sup>71)</sup>

전문관료의 부상은 지속적으로 권력서열이 상승한 ‘상승 엘리트’를 분석대상으로 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즉 상승 권력엘리트의 경우 전반적으로 당에 비해 정권기관 출신들의 비율이 더욱 뚜렷하다. 특히 1970년대부터 당 중앙위 정위원으로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지위상승을 한 사람들은 당 출신 비율이 여전히 높지만, 1980년대와 1990년대에 등장한 인물들의 경우는 점차로 정부출신들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북한에서 겹직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점차로 이념보다 전문성이 중시되는 추세를 증명한다. 비

71)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p. 128.

록 이러한 추세가 북한사회에서 이념분야가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확실히 뒷받침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는 실리를 중요시하는 전문기술관료가 좀 더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을 엿볼 수 있게 하는 점이다.<sup>72)</sup>

요컨대 북한의 권력엘리트 가운데 해외경험자가 증가하고 정권기관 출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북한의 지배층에서 현실주의적이고 융통성있는 성격을 띤 집단이 등장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북한체제가 미약하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향후 이러한 변화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되리라고 전망할 수 있는 논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 권력엘리트의 사회적 속성 가운데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체제를 주장하면서도 북한에서는 성, 지역, 학벌, 김일성의 친·인척관계 등 귀속적 지위가 권력엘리트로의 부상에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이다. 귀속적 지위로 연결된 집단은 일반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띤다는 점에서 북한 권력엘리트는 기존체제의 고수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점은 권력엘리트의 분열 가능성을 전망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제한적이거나 개방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권력엘리트 집단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귀속주의적 특성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면 장기적으로는 권력엘리트 집

72)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145~147.

단간의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현실주의적이고 개혁지향적인 성향의 인물들이 기존의 권력엘리트 구조에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지위상승이 제한되거나 소외된다면 이들이 새로운 체제를 모색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때 권력엘리트 집단 내에 파벌이 형성된다면 주로 귀속적 지위가 특징적인 김일성의 친·인척 집단과 전문관료집단간의 갈등에서 비롯될 개연성이 크다.<sup>73)</sup>

또한 연령별로 볼 때 아직도 북한이 원로중심의 등용정책을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엘리트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 현재 70, 80대의 노인이 서열 100위 이내 권력엘리트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50, 60대가 19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북한이 체제안정을 위해 빨치산 출신의 노장들을 포용하는 원로정치를 선호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는 상대적으로 신진세대의 득세와 정책적 영향력을 봉쇄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원로중심의 권력엘리트 교체의 지연은 인사적체에 대한 불만을 고조시킬 수 있다. 원로정치를 고수하는 한, 신진세대의 증가는 더욱 많은 지위를 필요하게 되고 지위부족은 신진세대의 불만을 야기, 조직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sup>74)</sup> 뿐만 아니라 당 우위 국가인 북한에서 실질적인 정책입안은 당 정치국이나 비서국이 하고 전문엘리트들이 가장 많이 등용

73) 위의 책, p. 113.

74)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pp. 67~70.

되어 있는 정무원은 구체적인 세부계획만 세우기 때문에 정부 관료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75)</sup> 경제난의 완화와 대외적 고립에서의 탈피라는 현실적 상황은 전문관료의 역할 증대를 필요로 함에도 그들이 체제의 성격상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것도 갈등을 內燃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어쨌든 북한의 주변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경제체제의 구조적 모순에 의해 경제침체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 권력엘리트의 성향이 실리주의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김정일은 제한적이고 신중한 개방 정책을 채택하겠지만 개방자체는 부정할 수 없을 것이고 이에 조용할 권력엘리트의 필요성 또한 증대될 것이다.<sup>76)</sup>

비록 현재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주민을 동원하기 위하여 혁명세대를 권력 상층부에 계속 기용하고는 있지만 세월의 흐름에 따라 빨치산세대의 자연적 감소와 경제성장 전략에 따른 전문가집단의 역할확대 및 그에 따른 수요증대로 인해, 젊고 더 많이 교육받고 좀 더 전문지식을 갖춘 인물들이 각 분야의 전면에 나서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장래는 이들 집단에 달려있고 조만간 이들의 목소리가 강해질 것이다.<sup>77)</sup>

75) 고영환의 증언에 의하면 당 국제부와 정무원 외교부와의 갈등이 심하다고 한다. 민족통일연구원 초청 정책세미나(1991.10.10)에서 한 고영환의 증언.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연구」, p. 98에서 재인용.

76)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p. 8.

## 2. 아래로부터의 변화: 지식인

### 가. 변화의 가능성

과연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조건이 현실적으로 조성될 수 있을까?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위로부터 변화의 대안이 주어지지 않을 때 가능하다. 만일 위로부터 변화의 대안이 제시된다면 아래는 그 대안과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잠정적으로 현상이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탄력이 없고 경직된 정치체제라면 변화의 대안 제시를 통한 적응에 실패하여 스스로 붕괴를 자초하는 비운을 맞게 될 것이다. 따라서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체제의 전환을 수반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하루 아침에 체제가 붕괴할 수도 있다는 주장은 이 때문에 설득력이 있다. 북한처럼 사회의 각 부문이 독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부문간 연결이 고도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소규모의 정치적 갈등이 단순히 권위구조의 변화 또는 지배세력의 교체에 그치지 않고 체제 전반의 존속을 위협할 정도로 발전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배세력의 교체가 있는 경우 새로

---

77) Robert A. Scalapino,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Uncertain Futur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p. 22.

운 세력이 체제의 통제구조를 재조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 때 이완된 통제구조 하에서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가 지적한 ‘왜곡된 근대성’에 의해 정치참여를 학습한 인민이 폭발적 동원을 통해 체제위기를 유도할 수 있다.<sup>78)</sup>

하지만 그러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 또한 매우 한정되어 있다. 물론 주민의 경제적 생활이 극도로 악화되면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축소되고 강제력에 의한 지배영역이 확대된다. 경제적 어려움과 강제력에 의한 지배를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판단을 할 정도로 상황이 더 악화되면 죽음을 무릅쓴 행동이 생긴다. 그 중 하나는 국가로부터 탈출하는 것이지만 탈출구가 막히면 죽음을 무릅쓰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 탈출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용이한 선택이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저항은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집합행동의 논리에 의해서 당분간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sup>79)</sup> 그리고 집단행동이 경제적 상황 때문에 발생하려면 경제가 생계를 어렵게 할 정도로 최악의 상태가 되어야 한다. 정보가 통제되어 있고 빈곤의 평등한 분배가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경제가 약간 후퇴하였다고 정권에 대한 지

---

78) S. N. Eisenstadt,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Vicissitudes of Modernity," *DAEDALUS*, vol. 121, no. 2 (Spring 1992).

79) 집합행동의 논리에 대해서는 Mancur Olson,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1965) 참조.



지를 철회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주민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상의 인내력을 발휘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실제적 상황으로 볼 때 아래로부터의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논리적으로는 두 가지 경우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sup>80)</sup> 하나는 경제문제나 부패 등으로 인해 동의에 의한 지배영역이 극도로 축소됨으로써 주민들이 최악의 선택마저 현상보다 낫다고 느낄 때다. 이 때는 체제전복이라는 선택이 가능하다. 물론 이 때에도 게임이론에서 거론되는 ‘죄수의 변민’(prisoner’s dilemma)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정보가 유입되어 현실과 이념의 괴리를 여실히 증명하여야 하고, 특히 정권내 분열이 심하여 강제력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할 때 가능하다.

아래로부터의 변화가 생길 또 하나의 경우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누가 권력투쟁에서 승리하든지 아래로부터 동의를 얻어 지배가 비교적 안정되어 있는 때이다. 아마도 이는 경제문제의 해결에 어느 정도 성공했을 때일텐데, 그 성공은 종래의 동원 경제가 경제문제의 해결에 있어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적이거나 경제개방을 통해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판도라의 상자’를 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경제개방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자유화가

---

80) 조기숙,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pp. 310 ~311.

불가피하다. 자유화와 근대화가 가져올 필연적 현상은 부의 성장에 따른 빈부의 격차, 사회의 분화와 다원화, 개인의 자율성 성장 등의 시민사회적인 요소의 등장이고, 시민사회의 성숙은 사회가 국가와는 다른 독자적 영역에서 변화의 대안을 만들 수 있음을 의미한다. 냉전시대에 공산체제를 설명해 온 전체주의 접근법의 문제점은 경제적 근대화 또는 공업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구조적 분화와 기능적 전문화가 이루어지고, 이는 결국 사회에 대한 다양성 요구와 정치적 견해에 대한 異見의 출현으로 결국 전체주의적 특징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한다는 데 있다. 이는 정치지도층의 의지와 다르게 경제분야나 사회분야는 시간이 흐를수록 다원주의적 경향과 요구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에서 부분적이고 산발적인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으나 북한에는 주민봉기를 주도할 사회세력이 존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들은 아직 주체사상만이 진리이고 옳이라고 믿고 있다. 따라서 반정부성격의 사회세력이 등장하여 철저한 정보정치와 중첩된 통제구조를 피해 대중운동을 조직화하고 전개할만한 단계에 이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사회세력의 등장은 적어도 수 년간 지속적인 개혁·개방정책이 실시되어 다수의 주민이 북한사회와 외부세계와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때에 비로소 가능하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성장과 사회세력의 등장을 가져올 단초는

이미 존재한다. 단초란 산업화와 교육수준의 향상, 세대교체 등으로 인한 사회구조의 분화이다. 우선 북한에서 이러한 요인들이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살펴보자.

북한에서 사회주의정권 수립 이후 경제적으로는 공업화, 정치적으로는 관료주의화가 진전됨에 따라 야기된 사회적 현상의 하나는 사회집단의 분화이다. 사회집단의 분화가 체제변화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학교 동창회나 鄉友會, 직장 친목회 등 다원적인 사회관계를 발달시키는 데 있다.

이렇게 사회집단이 분화되어 사회구성원의 관계가 다원화되면 이전과 같은 획일적이고 일사불란한 국가통제가 이완되기 마련이다. 각종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들의 활동이 활성화되어 독자적인 여론형성 구조를 낳게되고 국가의 공식적인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된다. 북한에서도 사회분화의 진전으로 비공식집단이나 소집단활동이 활성화되고 국가의 공식 선전은 이를 통해 여과되어 사회에 전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sup>81)</sup>

북한사회의 사회구조 분화 가운데 또 하나의 주요한 측면은 도시화의 진전이다. 1995년 현재 북한의 총인구 중 약 60%가 도시에 거주하고 있고 성인 인구 중 약 75%가 비농업인구라는 점에서 북한이 농업사회에서 비농업사회로 이행했음을 알 수 있다.<sup>82)</sup>

81)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pp. 145~146.

이렇게 도시화가 진전되면 개인들간의 상호작용 패턴이 달라져 사람의 입과 입을 통해 퍼지는 ‘口傳通信’이 발달할 수 있다. 口傳通信은 공식적인 통신에 비해 같은 얘기라도 과장될 가능성이 있다. 귀순자들의 증언에 의하면 북한 신문이 사회문제나 사건사고를 다루지 않아도 북한 전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대개는 알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도시화의 진전은 정보통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간 상호작용의 밀도를 높이기 때문에 비판의식이 전파될 가능성을 높인다. 대부분의 사회운동이 도시에서 일어난 것은 이러한 정보소통과 상호작용의 도시화 조건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sup>83)</sup>

한편 북한사회에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사회변화의 하나는 교육수준의 향상이다. 1972년부터 11년제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1977년 9월 5일 「사회주의 교육에 관한 테제」를 발표한 이후 교육투자를 강화하여 해마다 대학과 전문학교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있다. 이로써 대학은 1993년 말 현재 280여 개, 전문학교가 470여 개이며 교수, 박사를 비롯한 학위소지자들이 매년 1천명씩 배출되고 있을 뿐 아니라 대학교육을 받은 수가 160만명에 이른다고 한다.<sup>84)</sup>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비판적이고 독자적인 사유를 할 수 있

82) 통일원 편,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p. 33.

83)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p. 146~147.

84)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p. 193.

는 능력은 증가한다. 따라서 자유화 경향이 늘어난다. 귀순 유학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에서도 대학생 정도면 비판적인 생각은 한다”는 것이다. 또 학력이 높아지면 정치에 대한 기대 수준도 상승한다. 북한에서는 청년세대의 혁명성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것은 단지 혁명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세대여서라기 보다는 고등교육을 받고 이성적으로 더욱 각성된 세대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sup>85)</sup>

북한사회에서 일어난 또 한 가지의 변화는 혁명세대의 사멸로 체제 내에서 활동하는 행위자가 세대교체를 통해 대부분 바뀌었다는 점이다. 세대의 교체는 사회의 지배적인 의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온다.

북한주민 가운데 한국전쟁 이후에 출생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78.5%에 달한다. 전쟁 전에 태어나 혁명세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21.5%에 불과하다. 더 정확히 계산하여 일제치하 항일투쟁과 한국전쟁 동안 ‘대미투쟁’을 10세 이상의 나이로 직접 체험한 실질적인 혁명세대는 전체 인구의 12% 미만이다.

이 ‘새 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사회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식에서 체제에 대한 무조건적인 복종과 안주보다는 자아의식의 발전과 객관적인 판단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정권은 이들에 대해서 각급 학교, 사회단체, 군대 등 공식적인 정치사회화 기관을 통해 사상교양을

8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149.

실시하고 있지만 기성세대가 지니고 있는 체제에 대한 일체감이나 가치관을 갖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후세대가 기성세대처럼 위대한 수령, 친애하는 지도자, 혁명과업 등의 공식화된 용어를 사용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벨(V. Havel)이 지적한 바와 같이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인정을 받기위한 의례적인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다.<sup>86)</sup> 즉 이같은 용어들이 직접적인 강요나 억압에 의해서 사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면화된 상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sup>87)</sup>

김일성은 이미 1963년에 이러한 '새 세대'들의 특징을 혁명성 부족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새 세대'들의 사상성 문제는 오늘날 북한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즉 "혁명적 시련을 겪지 못하고 당의 품속에서 행복만을 알며 자라난 사람들이 적지 않으며 서구의 부르조아 문물에 물들기 쉽다"는 것이다.<sup>88)</sup> 이러한 세대들이 사회의 주역이 되면 체제에 대한 압력은 한층 높아질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사회는 철저한 통제체제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분화가 일어나고 있다. 직업구조의 분화, 도시화의 진전, 교육수준의 향상, 세대교체 등 구조적 측면에서

86) Vaclav Havel, *Power of the Powerless* (New York: Sharpe, 1985), pp. 23~96.

87) 주체사상이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내면화되어 있느냐에 대해서는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88) 「로동신문」, 1991.6.5.

의 분화는 지도부가 통제하기 어려운 변화들이다. 더욱이 북한 사회의 부패는 비합법적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을 침식해 들어갈 정도로 심각하다.<sup>89)</sup> 주민들은 지하경제를 통해 필수품을 조달하고 국가로부터의 통제가 불가능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적 정보교환의 공간을 확보해 가고 있어 사회주의의 중요한 요소인 집단주의적 사고가 위협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역에서 사적 영역이 점차 확대되어 사적 자율화가 진전되고 있다. 이는 북한주민들의 의식이 공적 원칙의 준수보다는 개인적 이익의 추구를 더 선호하며 이념적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가치의식이 변화한 결과이기도 하다.<sup>90)</sup> 혁명적 이념으로 사회적 동원이 이루어지는 사회에서 개인주의, 배금주의, 물질주의 의식이 팽배하다면 국가의 동원이테올로기는 설득력이 약해진다. 최근 북한에서 사상교양과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를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급변하는 사회의식을 반증하고 있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체제를 붕괴시킨 요인 중의 하나는 시민사회의 발달이었으나 현재 북한사회는 시민사회가 발달되기 이전단계인 신민사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사회의 모든 구조는 국가에 의해 침투되고 연계되어 있으며 개

89) 김성철, 「북한관료 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90) 서재진, 「북한 주민들의 가치의식 변화: 소련 및 동구와의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인들도 국가가 규정해 놓은 사회관계망 속에 통합되어 있다. 따라서 밑으로부터의 조직적인 저항세력의 형성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고 정치적 모순이나 경제적 비합리성에 대한 사회적 비판의 주체가 미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가 표면화되거나 조직화될 정도로 성장해 있지는 않지만 이미 지적인 이유로 인해 잠재해 있다는 사실은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시민사회의 성장과 아래로부터의 변화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세력은 누구인가? 소련 및 중국, 동유럽에서 체제에 대한 비판과 변화를 주도한 것은 모두 지식인들이었음에 비추어 북한의 지식인에게 주목할 수밖에 없다.

#### 나. 경계대상으로서의 지식인

주민봉기를 의미하는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주민이 '상대적 박탈감'(relative deprivation)을 절감할 때 발생한다. 박탈감이나 빈곤감을 비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갖게 되는 절대적인 박탈감이나 빈곤감은 체제로부터의 도피를 유도할 뿐이다. 북한 주민들의 탈북현상은 이러한 절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의 탈출구를 찾는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주민폭동, 혁명이 가장 가능한 상황은 현재의 북한과 같은 절대적 박탈감이나 빈곤의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어느 정도 생활이 나아졌으나 다른 사람들, 특히 남한 동포들이나 중국인민보다는



형편없이 가난하고 삶이 고통스럽다고 집단적으로 의식할 때이다. 즉 상대적 박탈감과 빈곤감이 바로 주민봉기, 체제도전의 필요조건이 된다.<sup>91)</sup> 이는 곧 누가 외부세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주어진 조건 속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누가 가장 크게 느낄 것인가 하는 기준이 북한에서 아래로부터의 변화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추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지식인은 첫 손에 꼽힌다.

북한은 폐쇄주의를 통해 외부정보의 유입을 차단해 왔으나 유학생, 무역회사원, 외교관 등 해외생활을 경험했거나 또는 이들과 자주 접촉하여 간접적으로 정보를 얻는 사람들의 경우는 일반주민과 매우 다른 정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기사, 전문가, 의사, 예술가 등 자연 및 사회과학 부문의 정신노동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sup>92)</sup> 이들을 북한의 표현대로 인테리라고 한다면<sup>93)</sup> 인테리집단은 현재

91) Ted Gurr,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특히 3장 참조. 이른바 'J-curve 이론'을 제시한 데이비스는 상대적으로 삶의 조건이 좋아지다가 급강하하는 상황이 오히려 삶의 조건이 계속 급강하하는 상태보다도 집단혁명 발발의 확률이 높다고 한다. James C. Davis,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II (February 1962).

92) 사회과학출판사 편,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p. 706.

93) 북한은 '인테리'를 "일정한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정신노동에 종사하는 사회계층 또는 그런 계층에 속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의 생활에 대하여 그 근원을 파고들려는 경향이 다른 계층보다 강하며 또 불만이 가장 많다.<sup>94)</sup>

실제로도 인테리집단은 북한 지도부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대상이다. 인테리들이 정권의 경계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이중적 성격으로 인해 동요할 수 있는 계층이라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데 연유한다. 일찌기 김일성은 인테리의 동요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력사적으로 보아 인테리들에게 동요성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테리들은 자본가에게 복무할 것인가 노동계급에 복무할 것인가 하면서 늘 동요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혁명투쟁에서 인테리의 동요성 문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sup>95)</sup>

따라서 김일성은 정권수립 직후부터 인테리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과 통제정책을 강화해 왔다.<sup>96)</sup> 그러나 이러한 숙청과 통제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에도 인테리계층은 여전히 문제의 불

---

‘지식인’과 동일하다고 보고 있다.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건」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p. 1708.

94)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의 현실」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3), p. 42.

95)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 총회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p. 200.

96) 북한정권이 인테리를 대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해 왔느냐에 대해서는 김성철,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씨로 남아 있었다. 김일성의 다음과 같은 연설은 이 점을 충분히 입증한다.

인테리들에게는 아직 낡은 사상 잔재가 적지 않게 있으며 나쁜 사상이 되살아날 수 있는 요소도 많습니다. 인테리들은 생산 실천과 떨어져 있고 많은 경우에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업상 특성으로 하여 사상적으로 단련할 기회가 적으며 낡은 사상에 쉽게 몰들 수 있습니다. 인테리들을 철저히 혁명화하여 참다운 로동계급적 인테리로 만들어야 그들이 변질되지 않고 당과 혁명에 끝까지 충실할 수 있습니다.<sup>97)</sup>

인테리에 대한 북한 지도부의 우려는 특히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발전했다. 동유럽과 소련에서의 개혁이 인테리의 주도로 이루어졌음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는 최고인민회의 의장 양형섭의 다음과 같은 논문을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역사적 경험은 인테리들을 로동계급의 진정한 인테리로, 참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교양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벌이지 않는다면 일단 사회주의의 길에 들어섰던 사람들도 제국주의자들이 퍼뜨리는 반동적 사상 공세 앞에서 사상적으로 무장해제되고 변질되어 사회주의의

---

97)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 (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p. 318.

길을 포기하고 치욕스러운 반혁명의 길로 굴러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sup>98)</sup>

1990년을 전후해 사회주의권에서 전개된 인테리들의 반체제 운동에 대해 김정일은 훨씬 더 직설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지금 일부 사회주의 나라들에서는 인테리들이 제국주의자들의 반공 선전과 반사회주의 책동에 넘어가 로동계급의 당과 국가를 반대하고 자본주의를 끌어들이는 데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의 인테리들 속에서는 자기의 지식을 자기 조국의 과학기술과 문학예술의 발전에 바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개인의 향락과 영달을 꿈꾸면서 조국을 배반하고 자본주의 나라들에 도주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sup>99)</sup>

김정일은 이러한 현상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인 것으로 말했지만 실상은 북한에서도 같은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 의구심은 같은 문헌 속의 다음과 같은 김정일의 말에서 부분적인 진실로 드러난다.

98) 양형섭, “주체혁명 위업을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우리 인테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근로자」, 제8호 (1990), p. 21.

99) 김정일,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9.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p. 274.

일부 사회주의 나라 인테리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그저 남의 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인테리들이 과학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는 인재이지만 로동계급의 당이 그들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면 그들이 혁명의 보배가 아니라 우환거리로 된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sup>100)</sup>

이러한 상황인식 때문에 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북한에서는 인테리들에 대한 통제와 감시가 더욱 강화되었다. 1992년 12월 9일부터 12일까지는 정권수립 이후 처음으로 ‘조선지식인대회’를 평양에서 개최하여 지식인들의 사상동요를 막고자 하였다. 이 대회에서 북한은 “지식인들의 운명과 미래는 사회주의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전체 지식인들이 “사회주의를 지키면 승리, 버리면 죽음”이라는 신념으로 ‘우리식 사회주의 고수’에 앞장설 것을 촉구하였다.<sup>101)</sup>

지식인에 대한 사상교육의 중요성이 여러 언론매체를 통해 반복되는 것을 볼 때 북한정권이 제1의 체제변화지향세력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은 지식인임이 분명하다. 특히 지식인집단 가운데 해외유학생 출신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해외유학 중 귀순한 유학생의 증언에 의하면 동유럽이나 소련으로 나간 유학생들은 2년만 지나면 거의 100%가 북한체제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변화한다는 것이다.<sup>102)</sup>

100) 위의 책, p. 275.

101) 「内外通信」, 綜合版 第46卷 (1992.7.1~12.31), p. 380.

102)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p. 180~181.

이 때문에 북한은 사회주의권이 붕괴하면서 소련을 비롯한 동유럽 국가에 나가있던 약 2천명의 유학생들을 모두 본국으로 송환하였다. 그리고 국가안전보위부에서는 유학생들에 대해 감시원 1명을 붙여 유학생 출신간 접촉, 해외 목격 내용의 발설 여부 등을 중점 감시하도록 하면서 6개월마다 1회씩 집체 사상교육을 시키고 신원문건에 '유학생 출신'임을 기록해 성분이 제일 나쁜 것으로 분류, 간부로 등용하지 않는다고 한다.<sup>103)</sup>

이렇게 낙인이 찍히고 당국의 감시를 받으며 간부로 등용되기도 힘든 상황이라면 해외 유학생 출신들은 자연히 반체제적 성향을 띠게 될 것이다.<sup>104)</sup>

103) 귀순자 윤웅, 이정철의 증언,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 374에서 재인용.

104) 유학생이나 지식인이 연계된 반정부조직이 적발되어 처형된 사례에 대한 귀순자의 증언에 관해서는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pp. 181~182, 375~376 참조.

## 제Ⅳ장 결 론

북한은 체제전환을 경험한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는 사회주의체제의 형성과정, 지배이념, 사회적 성격 및 권력엘리트간의 파벌 존재 유무 등 여러 측면에서 매우 대조적이다. 특히 북한은 동유럽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의 변화에 역으로 대응하여 변화를 억제해 왔다. 북한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념적·정치적 영역의 요인들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경제적 풍요나 국제적 협력관계와 같은 구조적 토대가 아니라 정보의 차단, 이데올로기적 동원과 같은 정치적 통제에 의존하여 사회주의체제의 정당성을 유지해 왔고, 이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이 점에서 북한정권은 '안정'되어 있다. 그러나 안정되어 있다고 해서 북한내에 반체제집단이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안정적이라는 것은 북한에 어떤 형태의 반체제집단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기존 제도 가운데에서 공통의 정치·사회적인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구성원도 극소수여서 현존의 정치질서를 대신하는 정치질서를 형성하는 것이 극히 어렵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것이 현재의 김정일체제가 장래에도 그대로 유지될 것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마도 김정일체제가 직면할 최대의 위기는 체제의 밖에서가

아니라 안쪽에서 나타날 것이다. 곧 독재체제에서 나타나기 쉬운 조직적인 병리현상이 심화되고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거세짐으로써 김정일체제가 사실상의 기능정지에 빠지는 상황은 김정일체제의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상정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김정일체제의 안정성 확보에 가장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는 요소는 경제난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의 사회통합 이완이다. 경제적 궁핍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항일유격대식 생활방식'으로 포장된 내핍생활의 지속은 필연적으로 정권의 효율성과 사회통합의 가속적인 이완을 초래하고, 이는 정통성을 크게 훼손하여 심각한 정치적 불안을 야기할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체제가 공통적으로 사회주의 통제원리의 효율성과 관료주의적 병폐로 인하여 경제가 쇠퇴하였다면 북한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북한의 경제침체를 가중시키는 요인의 하나는 여타 사회주의체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중앙계획경제체제라는 점이다. 북한이 당면한 경제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이든 변화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험이 시사하는 바다. 북한 지도부도 이미 문제의 본질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그 나름대로 대외개방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체제의 변화는 필연적이지만 변화과정은



결코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동일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특수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유지 방식의 폐쇄성, 분단체제 관리 및 체제경쟁의 부담, 다른 사회주의체제의 개혁에서 얻은 부정적 교훈 등 북한이 소련이나 동유럽, 심지어 중국 정도의 개혁도 선택할 수 없게 하는 제약요인이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로부터이든 아래로부터이든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거의 없다. 위로부터의 변화는 절대적인 권력자의 장기지배에 따른 권력엘리트들의 응집성 때문에,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시민사회의 미성숙 때문에 그러하다. 그러나 본문에서 밝혔듯이 이미 변화를 가져올 단초는 존재한다.

공식적으로 김정일체제가 출범하면 권력의 정통성의 기초는 김일성이 의거했던 전통적 및 카리스마적 정통성에서 점차 사회·경제적 업적을 기반으로 한 합리적 정통성(rational legitimacy)으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합리적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주의적이고 현실적이며 융통성을 갖춘 전문기술관료의 도움이 필요하다. 비록 김정일체제하에서도 충성심과 당성에 토대한 전문가의 증용은 이념적·체제적 이유에서 우선시될 것이 분명하지만 개방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개방지향적 전문가의 등용은 이미 증가하고 있다. 불가피한 개방정책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개방의 정도와 내용을 둘러싼 권력엘리트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이는 전문기술관료를 주축으로 한 개혁파의 등장으로 귀결될 것이다.

한편 북한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숙에 필요한 구조적 조건들이 등장하고 있다. 특히 사회집단의 분화와 도시화, 산업화, 교육 수준의 향상, 세대교체 등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식 및 행태의 변화는 사회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급격히 이완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뿐만 아니라 원자재와 연료부족으로 공장생산과 수송체계가 중단되고 마비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배급제가 불규칙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자재나 식량의 사적 거래가 확산되고 있으며 주민들의 개인이익 추구가 보편적 현상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한 지도부는 “고난의 행군정신”이나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와 같은 구호로 인내할 것을 호소하는 한편 여행제한을 완화하거나 쌀을 비롯한 생필품의 시장거래를 묵인해 주고 있다. 사상교육을 통한 對주민 설득과 물리적 억압은 앞으로도 여전히 중시될 것이나 경제적 反轉이 없는 한, 설득과 억압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사회통합과 정권의 효율성 증대의 효과적 수단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극적 경제회생의 가능성이 희박한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 정권이 주민들의 사회적 일탈행위를 묵인해 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아래로부터의 변화는 위로부터의 변화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요할 것이다. 사회내에 수많은 민중조직이 출현하여 시민사회가 성숙하려면 북한사회가 후기전체주의 사회로 이행되어야 한다. 소련에서 비공식집단이 출현하기 시작한 것은 브레즈네프 시대 말기였고<sup>105)</sup> 동유럽의 경우는 각국마다 사정이 다

르긴 하나 공산화 이전에 시민사회의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하라스치(M. Harastzi)는 동유럽에서 시민사회가 발전한 단계를 세 단계로 나누고 그 첫 단계를 국가가 사회에 대한 억압을 점차 완화하여 일정한 수준의 소비와 경제에서의 어느 정도의 분권화를 허용하며, 저항세력은 고립화되어 있지만 자율적 여론이 형성되고 국가로부터 자유로운 사회적 행위도 증가하는 단계라고 지적했다.<sup>106)</sup> 이는 동유럽의 경우 1950년대에 해당하는데, 북한은 아직 이 단계에도 못미치고 있다.

그러나 동유럽의 사례에서 보듯이 북한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에 지식인과 학생들이 주도적 역할을 할 것임은 분명하다. 보편적으로 지식인은 미래에 대한 이상향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진리를 추구하는데 북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그들은 사회주의권 붕괴 후 사회주의에 대한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괴리를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러한 괴리가 커질수록 비판의식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sup>107)</sup>

---

105) Thomas Remington, "A Socialist pluralism of Opinion: Glasnost and Policy-Making under Gorbachev," *The Russian Review*, vol. 48, no. 3 (July 1989), p. 296.

106) Miklos Harasztzi,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Peace Movement in the Soviet Bloc* (New York: Routledge, 1990), pp. 85~87.

107) 김성철,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p. 127.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김병로. 「주체사상의 내면화 실태」.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성철. 「북한관료 부패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_\_\_\_\_. 「북한 지식인정책의 변화」.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민족통일연구원 편.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1.

\_\_\_\_\_. 「사회주의체제 개혁·개방 사례 비교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북한문제연구소. 「북한의 현실」. 서울: 북한문제연구소, 1993.

사회과학출판사 편. 「조선말대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2.

\_\_\_\_\_. 「철학사전」.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사회구조와 사회의식의 이중성 연구」. 서울: 나남, 1995.

서진영. 「북한권력변동 및 사회변화 대비 계획연구: 예상 시나리오 및 대응방안의 검토」. 서울: 통일원, 1990.

\_\_\_\_\_. 「사회주의권의 대변혁과 북한체제의 변화에 대한 연구」. 서울: 통일원, 1989.

송택구·조범순. 「현대 소련정치론」. 서울: 형설출판사, 1988.

-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서울: 박영사, 1993.
- 이상우. 「함께 사는 통일」. 서울: 나남, 1993.
- 이영화. 「평양비밀 집회의 밤」. 서울: 동아출판사, 1994.
- 전현준. 「김정일 정권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  
원, 1995.
- 전현준·안인해·이우영. 「북한의 권력엘리트 연구」. 서울: 민족  
통일연구원, 1992.
- 정중욱. 「신중국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2.
- 조선중앙통신사 편. 「조선중앙년감」.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94.
- 통일원 편. 「북한개요」. 서울: 통일원, 1995.
- Burns, Timothy. ed. *After History?: Francis Fukuyama and  
His Critics*. Maryland: Little Adams Quality  
Paperbacks, 1994.
- Connor, Walter. *Socialism's Dilemma: State and Society in  
the Soviet Bloc*.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8.
- Fukuyama, Francis. *The End of History and the Last Man*.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 Griffith, William E. ed. *Central and Eastern Europe: The  
Opening Curtain?* Boulder: Westview Press, 1989.
- Gurr, Ted. *Why Men Rebel*.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70.

- Havel, Vaclav. *Power of the Powerless*. New York: Sharpe, 1985.
- Hong Young, Lee. *From Revolutionary Cadres to Party Technocrats in Socialist China*. Berke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 Huntington, Samuel P.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1991.
- Kolakowski, Leszek. *Main Currents of Marxism: Its Origins, Growth and Dissolution*. Oxford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 Lewin, Moshe. *The Gorbachev Phenomenon: An Historical Interpretatio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Lovenduski, Joni and Jean Wodall. *Politics and Society in Eastern Europ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7.
- Mason, David S. *Revolution in East-Central Europe: The Rise and Fall of Communism and the Cold War*. Boulder: Westview Press, 1992.
- Olson, Mancur.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New York: Schocken. 1965.

- Parsons, Talcott and Neil Smelster. *Economy and Society*.  
New York: The Free Press, 1956.
- Skilling, H. Gordon. *Samizdat and an Independent Society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London: Macmillan,  
1989.
- Tismaneanu, Vladimir. *Reinventing Politics: Eastern Europe  
from Stalin to Havel*. New York: The Free Press,  
1992.
- Townsend, James R. *Politics in China*. Boston: Little,  
Brown & Co., 1974.

## 2. 논 문

- 고학철. “우리 식대로 살아가는것은 우리당이 일관하게 견지하  
고있는 전략적방침.” 「근로자」, 제10호 (1989).
- 김광웅. “국가관료의 정책이해.” 한국정치학회 편. 「현대한국정  
치와 국가」. 서울: 법문사, 1987.
- 김남식. “북한의 권력구조 변화 전망.” 「통일문제연구」, 제3권  
제1호 (1991 봄).
- 김일성. “고등교육사업을 개선할 데 대하여(고등교육성당 총회  
에서 한 연설, 1965.2.23).” 「김일성저작집 19」.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2.

- \_\_\_\_\_.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1980.10.10).” 『김일성저작집 35』.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7.
- 김정일.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 『근로자』, 제6호 (1991).
- \_\_\_\_\_. “혁명과 건설에서 인테리들의 역할을 더욱 높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 앞에서 한 연설, 1990.9.20).”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문헌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홍명. “소련 통치엘리트의 충원과정에 관한 고찰.” 김달중 편. 『동구·소련관계와 개혁정치』. 서울: 법문사, 1988.
- 서진영. “정치제도와 권력구조의 변화.” 서진영 편. 『현대중국의 정치와 사회변동』. 서울: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86.
- 안병만. “소련 권력엘리트의 구성과 내부정치.” 『중소연구』, 제10권 2호 (1986).
- 양형섭. “주체혁명 위업을 힘있게 떠밀어 나가는 우리 인테리들의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 『근로자』, 제8호 (1990).
- 오명호. “중국정치엘리트의 순환과 충원.” 『중소연구』, 제10권 1호 (1986).
- 조기숙. “북한체제 변동 전망을 위한 정치경제학적 모델.” 통일원 편. 『북한·통일연구 논문집(Ⅲ)』. 서울: 통일원, 1993.



- Birch, Julian. "A Scheme for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 North Korea." A Paper presented at International Symposium on Human Rights in North Korea, Nov. 28, 1995.
- Breslauer, George W. "From Breznev to Gorbachev: Ends and Means of Soviet Leadership Selection." In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1989.
- Bruszt, Laszlo and David Stark. "Remaking the Political Field in Hungary: From the Politics of Confrontation to the Politics of Competition."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Cheng, Li and Lynn White. "The Thirte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Asian Survey*. vol. 28, no. 4 (1988).
- Davis, James C. "Toward a Theory of Revolutio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XXVII (February, 1962).
- Eisenstadt, S. N. "The Breakdown of Communist Regimes and the Vicissitudes of Modernity." *DAEDALUS*. vol. 121, no. 2 (Spring 1992).

- Haraszti, Miklos. "The Beginning of Civil Society: The Independent Peace Movement and the Danube Movement in Hungary." In Vladimir Tismaneanu, ed. *In Search of Civil Society: Independent Peace Movement in the Soviet Bloc*. New York: Routledge, 1990.
- Holmes, Leslie T. "The GDR: The search for autonomous patterns of development."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 Johnson, Chalmers. "Comparing Communist Nations." In Chalmers Johnson, ed. *Change in Communist Systems*.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0.
- Judt, Tony R. "Metamorphosis: The Democratic Revolution in Czechoslovakia."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Kuran, Tymur. "Now Out of Never: The Element of Surprise in the East European Revolution of 1989." *World Politics*. vol. 44, no. 1 (October 1991).
- Lodge, Milton. "Attitudinal Cleavage with in the Soviet Political Leadership." In Carl Beck, ed. *Comparative Communist*

-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1973.
- Miller, Robert 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An introduction."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 Remington, Thomas. "A Socialist Pluralism of Opinion: Glasnost and Policy-Making under Gorbachev." *The Russian Review*. vol. 48, no. 3 (July 1989).
- Rigby, T. H. "The USSR: End of a long, dark night?" In Robert F. Miller. ed. *The Developments of Civil Society in Communist Systems*. North Sydney: Allen & Unwin, 1992.
- Scalapino, Robert A.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The Uncertain Future."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 1993).
- Sharlet, Robert. "Dissent and the Contra-System in East Europe." *Current History*. vol. 84, no. 505 (November 1985).
- Starr, S. Frederick. "Soviet Union: A Civil Society." *Foreign Affairs*. no. 70 (Spring 1988).
- Taras, Raymond. "Political Competition and Communist Leadership: A Historiographical Introduction." In

-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1989.
- Todorova, Maria N. "Improbable Maverick or Typical Conformist?: Seven Thoughts on the New Bulgaria."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Verdery, Katherine and Gail Kligman. "Romanian after Ceausescu: Post-Communist Communism." In Ivo Banac. ed. *Eastern Europe in Revolution*.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1992.
- Weigle, Marcia A. and Jim Butterfield. "Civil Society in Reforming Communist Regimes: The Logic of Emergence." *Comparative Politics*. vol. 25, no. 1 (October 1992).
- Welsh, William A. "The Comparative Study of Political Leadership in Communist System." In Beck Carl. ed. *Comparative Communist Political Leadership*. New York: David Mckay, 1973.

### 3. 기 타

귀순자(현성일, 최승학, 윤성철, 진광호, 여만철)의 증언

「내외통신」.

「로동신문」.

「서울신문」.

## ◎ 發刊資料目錄 案內 ◎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 95-03 金正日 政權의 向方
- 95-04 南北韓關係 現況 및 '96年 政勢 展望
- 96-01 북한정세 변화와 주변4국의 대한반도정책
- 96-02 脫冷戰期 韓半島의 戰爭과 平和問題
- 96-03 北韓 經濟制度의 問題點과 改革 展望
- 96-04 북한의 대외관계 변화와 남북관계 전망

####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  
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北亞秩序 豫測(Ⅱ)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을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  
策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북한영화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과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 95-01 러·北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02 金正日 政權의 人權政策 變化展望
- 95-03 北韓 知識人政策의 變化
- 95-04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 95-05 金正日 政權의 權力엘리트 研究
- 95-07 서독의 分단질서관리 외교정책 연구:  
한국 통일외교에 대한 시사점 모색
- 95-08 北韓의 對美國政策 變化 研究
- 95-09 韓·日關係 變化展望과 韓國의 對應方案
- 95-10 金正日 體制下的 軍部役割: 持續과 變化
- 95-11 남북한 軍비통제의 포괄적 이행방안: 미·북관계  
및 남북관계 개선 관련

- 95-12 독일의 정치교육 연구:  
한반도 통일대비 정치교육에의 시사점 분석
- 95-13 북한의 협상전술 특성 연구:  
남북대화 사례를 중심으로
- 95-14 남북한 양자간 및 동북아 다자간 원자력협력에  
관한 연구
- 95-15 북한의 경제특구 투자환경 연구: 중국·베트남과  
의 비교
- 95-17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情勢와 韓半島政策 展望
- 95-18 北·美關係와 韓·美關係 變化展望
- 95-19 북한 주요 기초문헌 해제집(III): 「근로자」 해제
- 95-21 탈냉전기 중북한관계 변화 연구
- 95-22 북한의 경제개혁과 남북경협
- 95-23 통일문제에 대한 세대간 갈등 해소 방안
- 95-24 지역갈등 해소방안 연구: 국내적 통일기반 조성  
방안
- 95-25 金正日 政權의 對外政策 變化 展望
- 95-26 1995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6-01 김정일의 당권장악과정 연구
- 96-02 통일과정에서 매스미디어의 역할
- 96-03 동·서독 인적교류 실태 연구
- 96-04 동서독간 정치통합 연구
- 96-05 남북한 환경분야 교류·협력 방안 연구: 다자적·  
양자적 접근

- 96-06 북한과 주변4국의 군사관계
- 96-07 한·미 안보협력 증진방안 연구
- 95-08 동북아 평화체제 조성방안
- 96-09 북한 경제개혁의 최적방향 연구
- 96-10 통일과정에서의 민간단체의 역할
- 96-12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정에서의 한국의 안보 정책 방향
- 96-13 남북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 96-14 북한 사회의 계급갈등 연구
- 96-15 통일과정에서의 정당역할 연구
- 96-16 KEDO 체제하에서 남북한 협력증진에 관한 연구:  
협력이론을 중심으로
- 96-17 남북한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연구
- 96-18 북한 이탈주민의 사회적응에 관한 연구
- 96-19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변화와 남북경협 활성화 방안
- 96-20 미국의 대북한 경제제재 완화와 남북한관계
- 96-21 북한의 노동정책과 노동력 평가
- 96-22 한·러 안보협력 방안 연구
- 96-23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위기수준 평가 및 내구력 전망
- 96-24 북한체제의 변화주도세력 연구
- 96-25 북한의 농업정책과 식량문제 연구

##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  
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엘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  
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  
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  
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和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 95-07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 廢棄의 意味  
와 評價
- 95-08 江澤民 中國 國家主席 訪韓 結果分析

- 96-01 北韓의 承繼政治 動向: 2·16 生日行事를 中心으로
- 96-02 中國의 對內政策과 對臺灣政策 展望: 제8기  
全人大 4차회의 結果分析을 中心으로
- 96-03 北韓의 對美·中政策 懸案과 展望
- 96-04 周邊4國 頂上會談과 韓半島 安保環境
- 96-05 러시아 大選結果 分析
- 96-06 金日成 死後2年: 北韓政勢의 動向 및 展望
- 96-07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과 남북한 경제관계 전망
- 96-08 일본총선 結果분석
- 96-09 미국 대통령 및 의회 선거 結果 분석

###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 95-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7. 1 ~ 1995. 9. 30)
- 95-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0. 1 ~ 1995. 12. 31)
- 96-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1. 1 ~ 1996. 3. 31)
- 96-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4. 1 ~ 1996. 6. 30)
- 96-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6. 7. 1 ~ 1996. 9. 30)

###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 94-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 95-0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5~1996

〈論叢〉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統一研究論叢 第4卷 1號(1995. 8)

統一研究論叢 第4卷 2號(1995. 12)

統一研究論叢 第5卷 1號(1996. 7)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한독 WORKSHOP: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미 WORKSHOP : US-Korean Relations at Time of Change(1994)

###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 95-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追錄I)
- 95-02 藏書目錄: 特殊資料(追錄I)

### 〈통일문화시리즈〉

- 94-01 統一文化研究(上)
- 94-02 統一文化研究(下)
- 95-01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上)
- 95-02 統一과北韓社會文化(下)

---

---

북한체제의 변화 주도세력 연구

研究報告書 96-24

---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北韓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2가 산5-19

전화: 237-9288, FAX: 237-9289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266-0892

印刷日 1996년 12월 일

發行日 1996년 12월 일

---

---